

서해안 복선 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2021. 11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서해안 복선 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11

- 연구기관 : (사)자치분권연구소
- 책임연구원 : 김찬수 박사
- 공동연구원 : 김봉원 도시공학박사
이상인 (사)자치분권연구소 소장
- 보조연구원 : 이형근 연구지원국장
- 자문위원 : 박찬응 지역기반예술연구소 LBAR(르바) 예술감독
- 연구제안 :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 대표의원 : 이계양 의원
- 회원현황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위
1	대 표	이 계 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2	회 원	김 복 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3	회 원	전 익 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4	회 원	최 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5	회 원	노 윤 철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6	회 원	장 숙	충남연구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7	회 원	최 연 숙	당진시의회 의원
8	회 원	김 명 진	당진시의회 의원
9	회 원	안 병 환	당진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장
10	회 원	박 수 규	당진시 여성대표
11	회 원	황 재 선	당진시 개발위원장
12	회 원	김 양 수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3	회 원	윤 여 준	당진소방서 합덕119안전센터장

충청남도의회 귀중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 수행체계	3
제2장. 도농복합협도시의 현황 및 문제점	5
1. 입지 및 접근성	5
2. 인문·역사 및 사회·경제환경	7
3. 합덕읍 일반현황	18
제3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3
1. 상위계획 검토	23
2. 당진시의 발전계획 검토	28
제4장. 역세권 도농복합형 도시재생 방안	53
1. 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의 도농복합형 도시재생	53
2.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도시재생	58
제5장. 인구유입확산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확충방안	67
1.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	67
2.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	78
3. 이익공유제를 통한 인구유입	80
제6장. 요약 및 결론	93
1. 요약	93
2. 결론	96

표 목 차

- <표 2-1>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
- <표 2-2> 당진시 행정구역 면적
- <표 2-3> 당진시 문화유산
- <표 2-4> 연도별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 <표 2-5>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현황
- <표 2-6> 연도별 청년인구현황
- <표 2-7> 사업체 현황
- <표 2-8> 산업·농공단지 현황
- <표 2-9> 당진시 교육기관 현황
- <표 2-10> 당진시 결혼이민자 현황
- <표 2-11> 당진9경
- <표 2-12> 문화·레저 및 종교관련 관광자원
- <표 2-13> 주차장 현황
- <표 2-14> 공원 현황
- <표 2-15> 합덕읍에서 활동중인 단체현황
- <표 2-16> 합덕읍 사회적기업 현황
- <표 2-17> 합덕읍 방문객 현황
- <표 4-1> 탐방안내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설치지점
- <표 4-2> 선형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 <표 5-1> 분교와 캠퍼스의 차이
- <표 5-2> 국내 대학의 분교를 유치할 경우 장단점
- <표 5-3> 국내 대학 일부의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장단점
- <표 5-4> 국내외 유사사례 현황
- <표 5-5> 공유(공동)캠퍼스를 유치할 경우의 장단점
- <표 5-6>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익에 대한 유형
- <표 5-7> 이익공유 유형 및 정의
- <표 5-8> 이익공유 유형이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표 5-9> 주민 참여 정도에 따른 수준 분류
- <표 5-10> 이익공유체계 유형 정리표
- <표 5-11> 포괄적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자산화 운영 추진로드맵

그림 목 차

- <그림 1-1> 당진시 지도
- <그림 2-1> 당진시 지역현황도
- <그림 2-2> 당진시 접근체계 현황 및 반경
- <그림 2-3> 당진시 행정구역별 구분
- <그림 2-4> 당진시 관광현황지도
- <그림 2-5> 당진9경과 문화·레저 및 종교관련 관광자원 현황
- <그림 2-6> 합덕읍 도로명지도
- <그림 3-1>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 <그림 3-2> 서해안권 철도개발계획
- <그림 3-3> 충남권 개발계획
- <그림 3-4> 2030년 당진 도시기본구상도
- <그림 3-5> 2030년 당진시 개발계획도
- <그림 3-6> 석문산단 친환경수산업단지 계획도
- <그림 3-7> 미래전략산업 육성 활성화 구역
- <그림 3-8>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 <그림 3-9> 지속가능한 지역 소비체계 구축>
- <그림 3-10> 동남생활권 발전구상도
- <그림 3-1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그림 4-1> 합덕역 주변 개발계획
- <그림 4-2> 제주올래길 안내지도
- <그림 4-3> 경기옛길 6대로
- <그림 4-4> 외씨버선길 안내도
- <그림 4-5> 당진 버그내 순례길 홍보자료
- <그림 4-6> 순례길 연결망 예시도
- <그림 4-7> 순례길 연결망 상상도
- <그림 5-1> 주체와 수단, 문제 해결의 연결체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수도권과 전라권의 서해안을 연결하는 중앙관문인 당진은 국내 최대의 철강·물류산업 중심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
- 충남을 수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진 서해선 복선전철의 당진 합덕역사가 2022년말 완공되면 홍성·예산·당진(합덕)·아산·평택·화성 등을 경유하며 합덕에서 서울까지 50분대로 진입하게 되며, 합덕역에서 인터체인지가 있는 인근의 송악, 당진, 면천, 고대, 신암, 신창 등 6개 지역까지 15분내에 진출할 수 있어 인적·물적 교류 확산으로 지역발전의 최고·최대의 활력소가 될 것임.
- 더욱이 합덕역은 단순한 철도역이 아니라 GTX급으로 분류되는 서해안 복선전철과 합덕역~석문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산업관광 인입철도, 당진~대산간 횡단철도 등 4개 노선이 합쳐지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여객기능뿐만 아니라 화물 관련 시설까지 들어서면서 당진은 물론 충남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임. 합덕역 개통으로 역사 주변 일대는 대규모 다중역세권으로 개발되어 역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사람중심의 살맛나는 지역으로 일대 변화가 기대됨.
- 당진 합덕역은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시발점이자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의 개발전략과 지표를 수용하여 정부의 국토정책과 충남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면서 실현 가능한 당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속에서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을 통해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함.

- 한편 당진시의 발전전략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알아보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의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도농복합형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철도건설에 따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역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살고싶은 당진 합덕을 만들어야 하며, 편리한 교통여건이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당진시(합덕)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당진시내(합덕읍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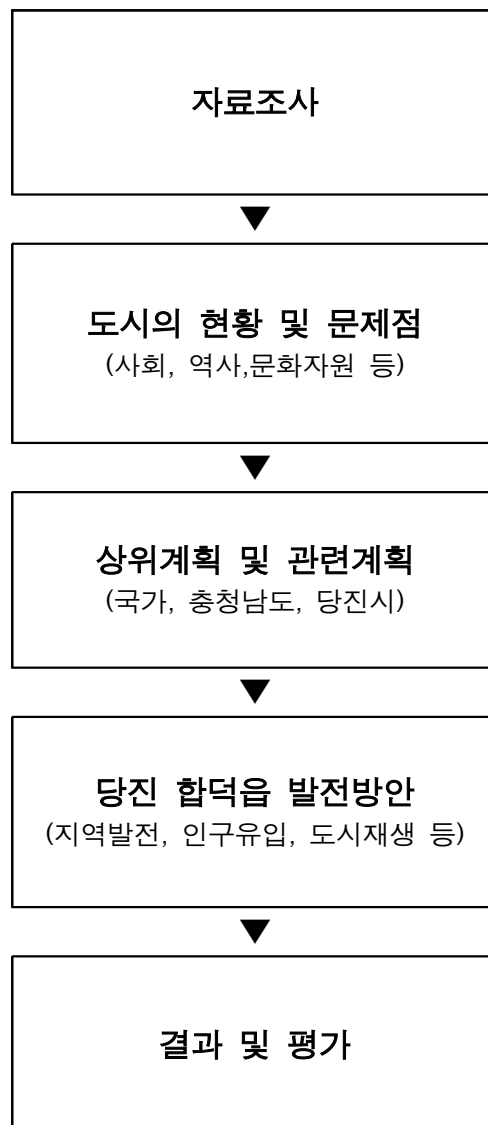


〈그림 1-1〉 당진시 지도

- 시간적 범위 : 2021년
- 내용적 범위
 - 도농복합형 도시 주변지역 현황 및 문제점 발굴 상생발전 방안
 - 지역개발(철도, 전철, 고속도로)계획을 반영한 도시재생 방안
 - 인구 유입 확산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교통, 환경, 교육시설 등)의 확충방안 마련

3. 연구 수행체계

○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도농복합형 도시의 현황 및 문제점

1. 입지 및 접근성

1) 지리적 위치

-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시는 북으로는 송산면, 송악읍, 석문면 등이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평택시 포승읍, 화성시 우정읍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평면, 우강면 그리고 합덕읍이 삼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인주면과 선장면에 접해있으며, 남쪽으로 합덕읍은 예산군 신암면과 접하고 면천은 예산군의 고덕, 봉산면과 접하며 정미면은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당진시의 2/3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대체로 산악과 구릉지가 연결된 넓은 평야지대로서 농업과 철강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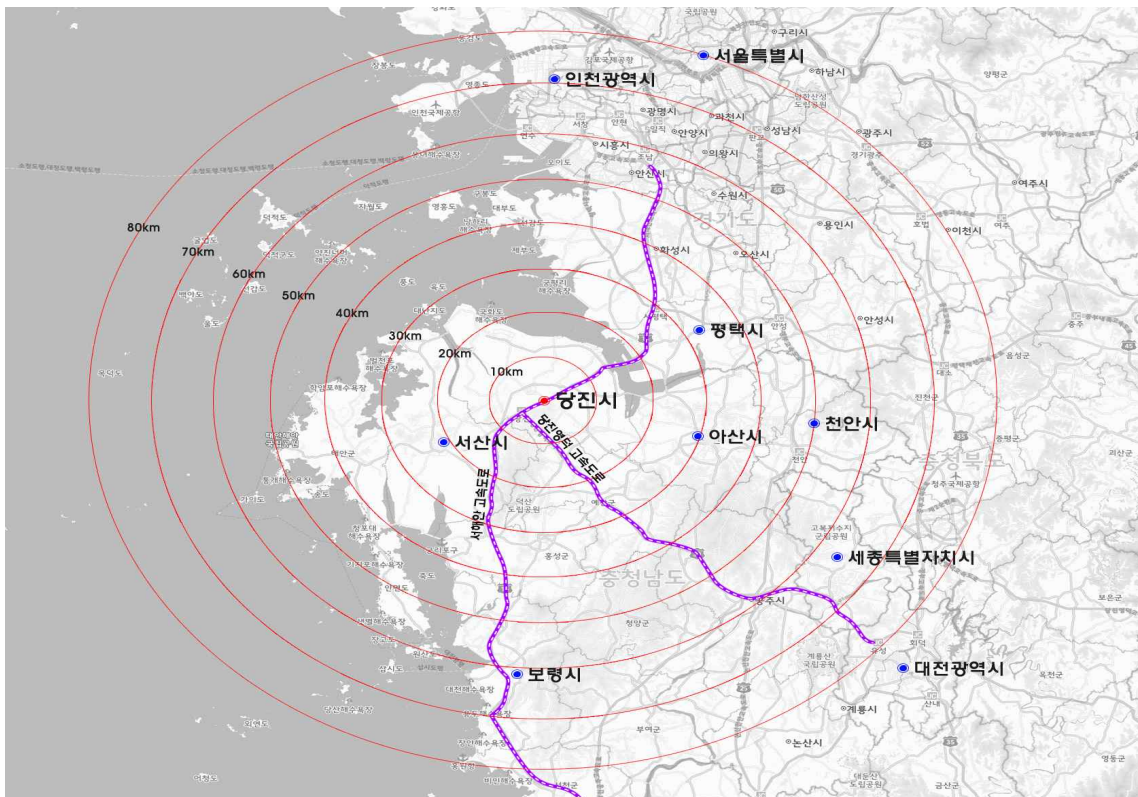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수리적 위치	당진은 4극점으로 볼 때 직사각형형태로 남북보다는 동서가 긴 모양으로 북위 36° 45' ~ 37° 04' 과 동경 126° 25' ~ 126° 51' 사이에 위치함
관계적 위치	당진시 읍내동에서 서울 102km, 수원 90km, 평택 50km, 천안 66km, 청주 120km, 대전 136km, 공주 93km, 홍성 42km, 서산25km, 강릉 329km, 포항 386km, 부산 430km, 목포 326km거리에 위치함
기후적 위치	한반도의 기후형인 온대계절풍 및 대륙성 기후권에 속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진지역은 온순기후에 해당되어 4계절이 뚜렷하고, 기후형으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여름에는 남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적 위치에 속하고 있음



〈그림 2-1〉 당진시 지역현황

2) 인근지역 접근성

-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보령시방향으로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평택시와 경기도 인근 수도권지역까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방면으로 당진 영덕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함
- 당진시는 당진항을 통한 중국과 최단거리 교역 등의 이점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음
- 당진시에서 직선거리로 서울 80km, 인천 70km, 대전 90km, 세종특별자치시 55km, 보령시 50km, 평택시 35km, 아산시 30km, 서산시 22km 임.



〈그림 2-2〉 당진시 접근체계 현황 및 반경

2. 인문·역사 및 사회·경제환경

1) 인문·역사환경

(1) 당진시 행정구역

- 행정구역 면적 : 694.75㎢(2020년 말 기준)
- 용도지역 면적 : 708.63㎢(해면부 13.88㎢ 포함). 도시지역(74.85㎢), 비도시지역(633.78㎢)
- 행정구역 현황 : 2읍, 9면, 3동(법정동 11), 273리·통(법정리 138), 1,560반

〈표 2-1〉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

읍면동명	법정동·리명
합덕읍	운산리, 도곡리, 소소리, 석우리, 성동리, 대합덕리, 대전리, 신리, 옥금리, 도리, 합덕리, 점원리, 신흥리, 신석리
송악읍	기지사리, 가교리, 방계리, 본당리, 청금리, 봉교리, 광명리, 반촌리, 영천리, 금곡리, 전대리, 도원리, 복운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한진리, 고대리, 월곡리, 정곡리, 석포리, 가학리
고대면	용두리, 슬항리, 대촌리, 장항리, 성산리, 당진포리, 옥현리, 향곡리, 진관리
석문면	통정리, 삼화리, 삼봉리, 장고항리, 교로리, 초락도리, 난지도리
대호지면	조금리, 사성리, 적서리, 도이리, 두산리, 장정리, 마중리, 송전리, 출포리
정미면	천의리, 승산리, 대조리, 도산리, 매방리, 우산리, 하성리, 산성리, 덕삼리, 봉성리, 수당리, 사관리, 대운산리, 덕마리, 신시리, 모평리, 봉생리
면천면	성상리, 성하리, 원동리, 문봉리, 자개리, 율사리, 대치리, 삼웅리, 송학리, 죽동리, 사기소리
순성면	봉소리, 백석리, 양유리, 나산리, 광천리, 본리, 중방리, 아찬리, 옥호리, 성북리, 갈산리
우강면	창리, 송산리, 세류리, 원치리, 공포리, 부장리, 신촌리, 강문리, 소반리, 대포리, 내경리, 성원리
신평면	금천리, 초대리, 거산리, 상오리, 남산리, 신송리, 신흥리, 운정리, 신당리, 도성리, 부수리, 매산리, 한정리
송산면	상거리, 금암리, 당산리, 송석리, 매곡리, 부곡리, 명산리, 도문리, 삼월리, 무수리, 유곡리, 동곡리, 가곡리
당진1동	읍내동, 수청동
당진2동	채운동, 대덕동, 행정동, 용연동, 사기소동, 구룡동
당진3동	우두동, 원당동, 시곡동

자료 : https://www.dangjin.go.kr/kor/sub04_01_03.do

- 행정구역별 면적은 석문면 13.6%, 송악읍 11.5%, 대호지면 9.5%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덕읍은 7.4%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당진시 행정구역 면적

구분	당진1/2/3동	합덕읍	송악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면적(km ²)	51.25	51.32	79.76	63.34	94.28	65.85
구성비(%)	7.4	7.4	11.5	9.1	13.6	9.5

정미면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산면	계
49.58	39.24	44.39	38.86	54.31	62.57	694.75
7.1	5.6	6.4	5.6	7.8	9.0	100.0

자료 : 당진시 2030 도시기본계획, 제1부 계획의 기초, p.4에서 재인용



〈그림 2-3〉 당진시 행정구역별 구분

(2) 당진시 역사문화유산

가. 당진시 연혁

-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역이었으며 삼국시대 백제 때에는 면천에 해군이 있어서 당진의 넓은 범위를 관장하였음.
-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해군은 혜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벌수지현은 당진현으로, 사평현은 신평현으로, 여춘현은 여읍현으로 개칭됨.
- 고려시대 초기는 지방제도가 설치되지 않고 지방호족이 다스렸으며 성종(成宗) 2년(983)에 전국을 12주로 나눌 때는 공주에 속함.
- 고려8대 현종 9년(1018)에는 운주(현 홍성)에 속한 당진현이었으며, 고려 제16대 예종 원(1105)에는 감무를 두었고, 고려 말엽 공민왕 7년(1358)에는 홍주목에 속했음.
-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 때와 같이 홍주목에 속했으나 태종 13년(1413) 당진에 다시 현감을 둬 따라 충청도 당진현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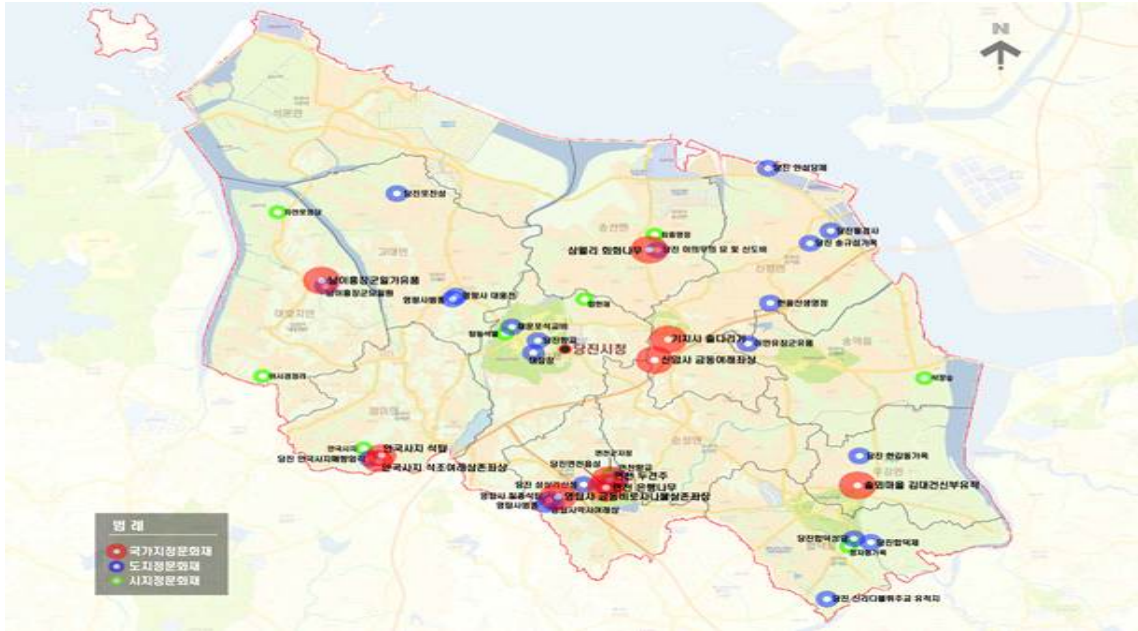
- 조선시대 말엽 고종 32년(1895)에는 당진군이 되어 군내, 동면, 남면, 상대, 하대, 고산, 외맹, 내맹의 8개면을 관할함
- 1914년 군면 폐합 때 면천군의 22개면과 해미군 일도면 대운산의 2개리와 염솔면 삼곡리의 일부와 예산군 신종면의 옥금 흑석의 2개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당진군으로 함.
- 1957년 11월 6일에 법률 제456호에 의하여 서산군 대호지면과 정미면 18개리 전체를 편입하여 12개면을 관할함.
- 1963년 1월 1일, 당진면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73년 7월 1일에 다시 합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또한 정미면 여미리가 서산시 운산면에 편입되어 2읍 10면 149개리가 됨.
- 2010년 1월 1일 송악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3읍 9면 149개리로 되었다가,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이 당진시가 되어 2읍 9면 3동(138개 법정리, 11개 법정동)이 되었으며, 기존의 당진읍은 3개 동으로 분할 설치됨.

나. 당진시 역사문화유산

-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이 4점으로 가장 많고 사적과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이 분포되어 있음.

〈표 2-3〉 당진시 문화유산

지정	구분	문화재명
국가지정 (10)	보물(4)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좌상(3구), 당진 안국사지 석탑(1기),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1구),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1구)
	사적(1)	당진솔미마을 김대건신부유적(2,000㎡)
	천연기념물(2)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1주), 면천은행나무(2주)
	무형문화재(2)	기지사찰다리기, 면천두견주
	중요민속자료(1)	남이흥장군일가유품(37점)
도지정 (24)	유형문화재(3)	영량사대웅전(1동), 이만유장군유품(9점), 영탑사약사여래상(1기)
	기념물(11)	남이흥장군묘일원(1기), 당진합덕제(1,771m), 당진면천읍성(17,366.4㎡), 당진필경사(1동), 당진향교(1동), 면천향교(1동), 당진합덕성당(1동), 당진성상리산성(토성1식), 당진안국사지매향암각(암각1기), 당진 신리다불위주교 유적지(1,554㎡), 당진 이의무의 묘 및 신도비(7,201㎡)
	민속자료(1)	당진송규섭가옥(1,299㎡)
	무형문화재(2)	당진안섬당제, 대장장
	문화재자료(7)	영탑사칠층석탑(1기), 채운포석교비(1기), 영탑사범종(1개), 영량사범종(1개), 한음선생영정(1점), 당진한갑동가옥(2동), 당진포진성(20,846.9㎡)
시지정 (9)	향토유적(9)	면천군자정(1동), 차천로영당(1점), 최충영정(1점), 이시경정려(1동), 입한재(1동), 안국사지(1지구), 탑동석물(10점), 석장승(돌미륵)(1점), 정자형가옥(1동)



〈그림 2-4〉 당진시 관광현황지도

2) 사회·경제환경

(1) 인구현황

- 2020년말 당진시의 총인구는 171,699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마이너스 0.67%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
- 세대수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227세대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17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연도별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구분	인구수(외국인)	증감률	세대수(내국인)	노인인구비율
2016	171,870(5,240)	0.95	73,434	16
2017	172,816(5,377)	0.55	74,586	16.4
2018	173,544(5,774)	0.42	75,540	16.7
2019	172,865(5,823)	△0.39	76,162	17.9
2020	171,699(5,450)	△0.67	77,661	18.8

자료 : 당진시, 2021 상반기 알기쉬운 당진시 100대통계

- 2021년 5월 기준, 당진시의 총인구는 171,677명이며, 그 중 외국인은 5,186명임.
- 송악읍의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당진1동 등 동지역이 많으며, 합덕읍은 14개 읍면동 중 8번째로 인구가 중간정도에 속하는 9,722명으로 나타남.

〈표 2-5〉 당진시 읍면동별 인구현황(2021년 5월, 단위 : 명)

읍면동	합계			한국인				외국인		
	남	여	계	세대	남	여	계	남	여	계
합덕읍	5,223	4,499	9,722	4,663	4,680	4,228	8,908	543	271	814
송악읍	17,542	13,827	31,369	14,130	16,702	13,432	30,134	840	395	1,235
고대면	2,838	2,657	5,495	2,777	2,748	2,628	5,376	90	29	119
석문면	5,868	4,043	9,911	5,837	5,771	3,972	9,743	97	71	168
대호지면	1,227	1,208	2,435	1,267	1,205	1,203	2,408	22	5	27
정미면	1,955	1,796	3,751	1,944	1,862	1,773	3,635	93	23	116
면천면	2,025	1,741	3,766	1,827	1,811	1,713	3,524	214	28	242
순성면	2,781	2,575	5,356	2,568	2,540	2,503	5,043	241	72	313
우강면	2,619	2,577	5,196	2,479	2,579	2,542	5,121	40	35	75
신평면	8,229	7,815	16,044	6,628	7,908	7,627	15,535	321	188	509
송산면	6,909	5,110	12,019	5,918	6,698	5,018	11,716	211	92	303
당진1동	13,489	11,916	25,405	11,888	13,135	11,527	24,662	354	389	743
당진2동	11,667	11,270	22,937	9,339	11,510	11,057	22,567	157	213	370
당진3동	9,379	8,892	18,271	7,134	9,328	8,791	18,119	51	101	152
계	91,751	79,926	171,677	78,399	88,477	78,014	166,491	3,274	1,912	5,186

자료 : 당진시청 홈페이지, 통계정보, 당진통계>인구통계>세대 및 인구>2021년 인구현황,

https://www.dangjin.go.kr/prog/sen_pop/stat/sub02_01_01/list.do

○ 청년인구는 2016년 53,026명에서 2020년 46,22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6〉 연도별 청년인구현황

구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덕읍	2,404	2,228	2,051	1,914	1,711
송악읍	9,098	8,962	9,899	9,594	8,952
고대면	1,226	1,133	1,041	951	875
석문면	2,305	2,661	2,623	2,439	2,346
대호지면	446	428	389	350	331
정미면	763	722	657	662	611
면천면	760	722	657	622	584
순성면	1,196	1,124	1,031	931	831
우강면	1,303	1,189	1,067	992	917
신평면	5,283	4,971	4,671	4,324	3,949
송산면	4,334	4,212	3,919	3,731	3,464
당진1동	10,074	9,906	9,403	9,072	9,050
당진2동	6,846	6,768	6,776	6,635	6,606
당진3동	6,988	6,950	6,471	6,370	5,996
계	53,026	51,969	50,627	48,587	46,223

자료 : 당진시, 2021 상반기 알기쉬운 당진시 100대통계

(2) 경제산업

가. 산업구조

- 사업체 수는 3차 산업이 85.0%(10,432개)로 가장 많고, 2차 산업 14.4%(1,771개), 1차 산업 0.6%(76개)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종사자 수는 3차 산업이 59.2%(45,6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차 산업 40.3%(31,096명), 1차 산업 0.5%(378명) 순으로 나타남.

〈표 2-7〉 사업체 현황(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1차	농업, 임업 및 어업	34	306
	광업	42	72
2차	제조업	8	1,35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70	29,12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4	619
	건설업	489	5,455
3차	도매 및 소매업	215	7,555
	운수업	164	3,366
	숙박 및 음식점업	15	6,5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	418
	금융 및 보험업	535	1,18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4	1,4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4	1,2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59	3,5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39	1,807
	교육 서비스업	425	3,6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4	4,5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32	9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71	3,849
	합계	12,279	77,078

자료 : 2019년 3월, 당진통계연보

나. 산업 및 농공단지

- 당진시에는 3개소의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5개소의 단지가 있으며, 농공단지는 당진, 면천, 석문, 송악, 신평, 한진, 합덕 등 7개소가 입지함.

〈표 2-8〉 산업·농공단지 현황(단위 : 천㎡, 개, 명, 억원)

구분		위치	총면적	업체수		종업원수	비고
				입주	가동		
국가 산업 단지	아산 (고대, 부곡지구)	송악읍	3,118,889	131	113	3,787	27,730
	석문	석문면, 고대면	12,011,613	121	53	509	6,121
	아산 고대지구 (구. 아산국가산단)	송악읍	3,036,397	9	6	906	24,678
일반 산업 단지	합덕	합덕읍	969,884	48	31	1,069	2,442
	당진1철강	송악읍	2,018,406	5	4	2,674	2,674
	현대제철 (송산)	송산면	5,816,855	1	1	4,082	25,732
	송산2	송악읍	4,290,299	43	22	763	6,427
	합덕인더스파크	합덕읍	641,104	5	2	489	1,130
농공 단지	당진	시곡동	85,038	15	15	165	159
	면천	면천읍	139,101	9	9	183	309
	석문	석문면	214,599	4	4	216	3,151
	송악	송악면	170,923	22	22	325	2,490
	신평	신평면	137,866	8	8	267	412
	한진	송악면	142,580	2	2	583	1,728
	합덕	합덕읍	106,212	29	29	410	1,119

자료 : 당진시청 경제과

다. 도시개발사업 현황

○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6개지구(당진 수정지구, 당진수정 1지구, 당진수정2지구, 당진읍내1지구, 당진2지구, 합덕소소지구)임

연번	명칭	위치	면적 (㎡)	인구수	시행기간	사업비 (억원)	시행자	시행방식
1	당진 수정지구	수정동 일원	146,892.5	2,620	‘16.12.30. ~ 환지처분일	385	당진수정 지구 도시개 발조합	환지방식
2	당진수정 1지구	수정동 일원	942,999	11,668	‘19.1.24~ 환지처분일	1,930	당진수정1 지구 도시개 발조합	환지방식
3	당진수정 2지구	수정동 일원	491,991	9,145	‘14.12.10~ ‘21.12.31	2,632	충청남도 개발공사	수용 및 사용방식
4	당진읍내 1지구	읍내동 일원	26,707	1,002	‘18.1.30~ 공사완료일	436	뉴블파크지 역 주택조합	수용 및 사용방식
5	당진2지 구	우두동일 원	234,030	3,699	‘20.10.13. ~ 환지처분일	693	당진2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환지방식
6	합덕소소 지구	합덕읍 소소리 일원	32,200	724	‘18.12.28. ~ 공사완료일	151	권진외 2인	수용 및 사용방식

자료 : 서해선복선전철 당진합덕역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자
료집(2021) p.43에서 재작성

3) 교육·문화

- 당진시에는 교육기관이 89개, 학생수 26,378명이며, 교원수는 1,780명임.
-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으로는 신성대학교,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가 있음.

〈표 2-9〉 당진시 교육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학급(과)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계	남	여		
계	89	946	26,378	13,778	12,600	1,780	14.8
유치원	35	89	1,439	717	722	132	10.9
초등학교	30	486	10,530	5,457	5,073	743	14.2
중학교	13	170	4,498	2,371	2,127	365	12.3
고등학교	8	155	3,732	2,005	1,727	348	10.7
전문대학	1	30	3,678	1,692	1,986	117	31.4
대학(교)	2	16	2,501	1,536	965	75	33.3

자료 : 당진시, 2021 상반기 알기쉬운 당진시 100대통계(2020년 4월 1일 기준)

- 당진시에는 다문화가구수가 1,608가구로 전년대비 5.7%가 증가하였음. 다문화가정에서의 출생이나 귀화, 또는 결혼이민 등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10〉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구분	가구	증감률	가구원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	외국인 (기타)
2015	1,345		4,349	2,944	529	726	150
2016	1,338	△0.5	4,498	3,035	578	714	171
2017	1,411	5.5	4,636	3,061	640	764	171
2018	1,521	7.8	4,922	3,249	683	805	185
2019	1,608	5.7	5,152	3,348	745	844	215

자료 : 자료 : 당진시, 2021 상반기 알기쉬운 당진시 100대통계

4) 관광

- 당진시에는 당진9경으로 왜목마을 일출,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난지섬 해수욕장, 삽교호, 석문호, 대호 방조제 등 제방질수(방조제), 솔외성지, 도비도 관광단지, 삽교호 함상공원, 아미산 아미망루,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 있음.

<표 2-11> 당진9경

구분	명칭	위치	특징
제1경	왜목일출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15-5 왜목마을	왜목마을은 지형적으로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면서 최북단 서해바다로 가늘고 길게 뻗어나간 특이한 지리적 특성으로 자연이 빚어낸 일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음
제2경	서해대교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 서해대교	총연장 353km의 서해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가장 큰 난공사였던 서해대교는 7년의 공사 끝에 완공됨으로써 당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음
제3경	난지섬해수욕장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67 난지섬해수욕장	난초와 지초가 많이 자생한다 하여 난지섬으로 이름 붙여진 이 섬은 바닷가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고 수심도 완만하여 해양레포츠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
제4경	제방질주(방조제)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3길 100	당진시에는 1970년대 처음으로 건설된 삽교호방조제를 비롯하여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등 3개의 방조제가 있어 이를 연계하는 드라이브코스로 유명함
제5경	솔외성지	당진시 우강면 솔외로132 솔외성지	솔외는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라는 뜻으로,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며 그의 생가와 기념관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성지순례자들의 방문이 잦은 곳임
제6경	도비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888-14 도비도	7.8km의 바닷길을 갈라 당진시와 서산시를 잇는 대호방조제 완공 후 육지가 된 도비도는 농촌체험과 어촌체험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
제7경	함상공원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 삽교호함상공원	퇴역함을 활용하여 해군체험관, 역사관 등을 조성하여 해군·해병대들의 선상생활과 군사적 임무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군함테마공원임
제8경	아미산(아미망루)	당진시 면천면 아미로 354-29 아미산	아미산은 당진의 명산으로, 다불산(310m)과 몽산(298m)이 양 날개를 펼치듯 능선을 뻗어 연봉을 이루고 있어 낮은 산이지만 아기자기한 산행을 즐길 수 있음
제9경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500년 전통의 중요무형문화제 제 75호인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줄다리를 비롯하여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자료 및 각종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임

자료 : https://www.dangjin.go.kr/prog/turismCn/tour/sub01_01_01/view.do?cntno=10

〈표 2-12〉 문화·레저 및 종교관련 관광자원

구분	명칭	위치	특징
전시 시설	함상공원	신평면 삽교천3길 79	퇴역군함 2척으로, 해군·해병대 체험을 위한 Ship Stay를 운영하며, 상륙함, 구축함, 야외전시물, 해양테마과학관, 우드데크에서 해군·해병대 체험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에 안보의식과 신체발달을 함양함
	함덕수리 민속박물관	함덕읍 덕평로 379-9	2008년 개관한 민속박물관으로 조선 3대 저수지의 하나였던 함덕제를 기념하는 수리전문 공립박물관으로, 현재는 동전, 석기, 도자기 주제로 전시하며 규모는 41,478㎡, 운영인력 262명이며, 소장자료 683점 보관
	기지사 줄다리기 박물관	송악읍 안틀모시길 11	2011년 개관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제인 기지사줄다리기 등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자료와 각종체험시설을 갖추고 민속을 주제로 하는 공립박물관으로 규모 16,089㎡, 운영인력 56명이며, 소장자료 350점을 보관
	순교자 미술관	함덕읍 평야6로 135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신리성지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순교 미술관으로, 다섯 성인의 영정화 5점과 다블뤼 주교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1000호 크기의 순교기록화 13점 등 총 18점의 작품을 전시
	심훈기념관	송악읍 상록수길 97	일제강점기 소설가 겸 시인이었던 심훈의 대표적 소설인 “상록수”를 집필한 당진 필경사 일원에, 그의 향일 및 계몽전신을 후세에 선양하고자 건립한 기념관
	당진 아미미술관	순성면 남부로 753-4	1993 폐교된 유동초등학교 개조 2011년 개관한 사립 미술관, 규모는 991.7㎡, 운영인력 5명, 소장자료 700점, 관람료는 무료이고, 연간 방문객 수 8,500명임
천주교 관련 시설	솔뫼성지	우강면 송산리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장소이자 국내 가톨릭성지로 천주교 역사 및 김대건 신부의 유품과 유골이 전시
	함덕성당	함덕읍 신리	1899년 양촌성당이 이전하여 세워진 함덕성당은 쌍탑으로 이루어진 종탑과 연와조 등 독특한 구조가 특징
	신리성지 (신리공소)	함덕읍 함덕리	박해기 내내 이 지역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우촌이자 성 다블뤼 주교가 거처하던 곳
불교 관련 시설	영랑사	고대면 진관리	564년(백제 위덕왕 11년) 아도가 창건 불교사찰 당진 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대웅전, 동종이 문화재로 지정
	영탑사	면천면 성하리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하였으며, 대웅전을 비롯한 약사여래상, 금동삼존불 등이 문화재로 지정
	안국사지	정미면	백제의 절터로 안국사지 석불입상, 안국사지 석탑, 안국사지 매향암각 등이 문화재로 지정
	신암사	송악면 가교리	고려 중신 구예의 부인 아주신씨가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기위해 창건한 사찰로 당진신암사금동불좌상이 문화재로 지정
문화 레저 시설	해어름카페	신평면 매산해변길 144	1선뷰와 함께 일몰을 감상하기 좋은 카페로, 통유리로 된 건물 내부좌석과 야외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음
	삽교호 놀이동산	신평면 삽교천3길 15	삽교호 관광지내의 테마파크로, 서해대교와 호수, 바다를 조망, 수산물시장과 함상공원, 해양테마과학관, 바다공원, 생활체육공원, 월드아트스커스공연장 등 있음

자료 : 김상태 외, 당진시 산업관광 거점지구 조성 기본구상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9, pp.79~80

- 당진9경으로 왜목일출, 서해대교, 난지섬해수욕장, 제방질주(방조제), 솔피성지, 도비도해양체험, 함상공원, 아미망루(아미산),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이 있으며, 삼교호관광지와 왜목마을관광지, 도비도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함.
- 충남사회조사에 따르면, 당진시민은 외지의 친구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당진의 문화 축제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가장 많이 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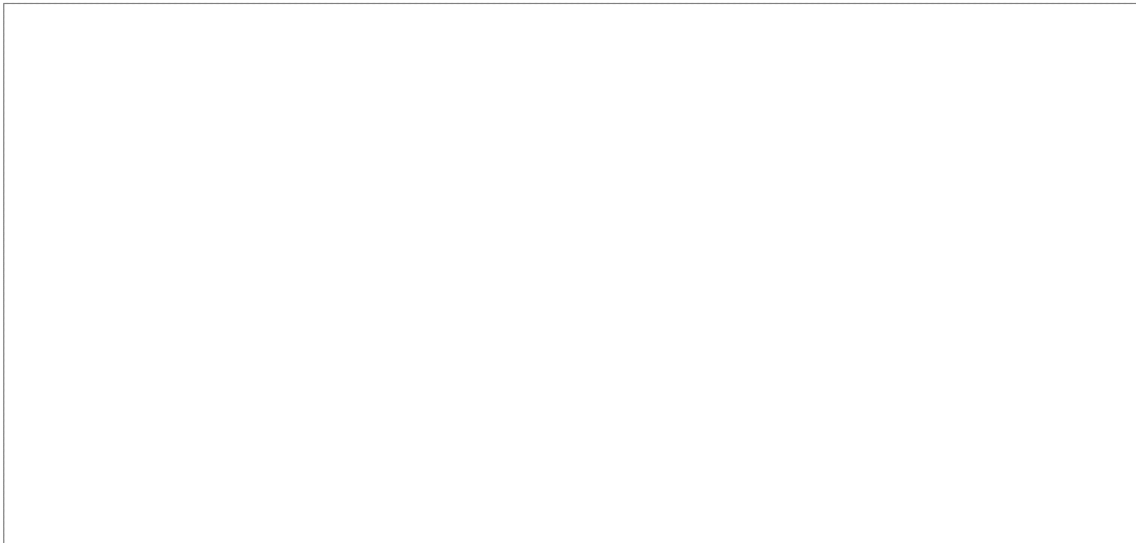
〈그림 2-5〉 당진9경과 문화·레저 및 종교관련 관광자원 현황

- 당진시에는 문화축제, 음식축제, 해돋이 축제 등 다양한 주제의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어 비수기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시 기지시리의 민속놀이로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무형문화재로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암줄과 수줄은 길이 200m로 전통방식 그대로 제작함.
- 당진시에는 짚공예, 생활도자기, 토우 생활도예를 중심으로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허브체험농장까지 다양한 주제의 문화예술체험거리가 있음.
-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들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는 물론 숙박까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당진시 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3. 합덕읍 일반현황

1) 입지 및 공간구조

- 입지적으로는 당진시 합덕읍은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합덕읍 전 통시장, 한우특화거리, 버그내순례길, 합덕성당 등 풍부한 잠재자원이 있음.
- 면적은 51. 38㎢(경지 59.4%)으로 당진시 전체의 7. 7%를 차지함.
- 도로사정은 인근 32번과 40번국도, 70번, 615번, 622번 지방도, 합덕버스터미널 등을 통한 접근성이 용이하며, 개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역 입지로 인구 유입이 기대됨.
- 합덕읍에는 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합덕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그림 2-6> 합덕읍 도로명지도

- 공간적으로 당진시는 당진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1핵구조와 6부핵구조로 나뉘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합덕읍은 부핵에 해당됨.
- 또한 당진시는 중심도시권육성,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 방향, 행정구역, 도시공간구상 등을 고려하여 서해생활권, 중심생활권, 동남생활권 각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함.
- 합덕읍은 동남생활권에 해당하며, 중심권의 기능 분담 및 당진항·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원 기능을 담당함.

2) 생활환경

- 합덕읍내 주차장은 총 17개소로 주차대수는 총 50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당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4,251대로 총 주차면수와 대입하였을 때, 주차장 확보율은 112.3%로 나타남.

- 합덕읍 주차장 확보율은 8.8%로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안하면,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면수의 확충이 필요함. 특히 합덕전통시장 주변 200m내 1일 평균 불법주차 대수는 33대이며, 5일장 개장시에는 평균 불법주차대수는 39대로 집계되었음.

<표 2-13> 주차장 현황

구분			충남	당진시	합덕읍
노상주차장	유료	개소	27	2	-
		면수	1,035	42	-
	무료	개소	191	24	8
		면수	8,096	724	274
노외주차장	공영	개소	774	75	9
		면수	42,623	3,490	233
	민영	개소	161	5	-
		면수	13,675	561	-
부설주차장		개소	71,558	7,843	-
		면수	1,089,251	101,006	-
합계		개소	72,711	7,949	17
		면수	1,154,680	105,823	507
자동차등록대수			1,093,582	94,251	5737
주차장 확보율			105.6	112.3	8.8

자료 : 당진시(2019), 당진통계연보, 충남(2019), 충청남도 통계연보, 당진시(2021)
당진시 내부자료

<표 2-14> 공원 현황

구분		당진시	합덕읍
어린이공원	개소	49	4
	면적	105	6
소공원	개소	35	4
	면적	62	18
근린공원	개소	46	3
	면적	3289	120
역사공원	개소	3	1
	면적	121	36
문화공원	개소	1	-
	면적	8	-
수변공원	개소	4	-
	면적	38	-
체육공원	개소	2	2
	면적	15	15

자료 : 당진시(2019), 당진통계연보, 충남(2019), 충청남도 통계연보, 당진시(2021)
당진시 내부자료

- 합덕읍에는 어린이 공원 4개소, 소공원 4개소, 근린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은 0.018km²로 낮은 편임.

3) 지역자원 현황

- 당진시는 사회적기업 15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2개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합덕읍에는 19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합덕읍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표 2-15> 합덕읍에서 활동중인 단체현황

합덕읍 주민자치회,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합덕읍분회, 합덕읍 이장단협의회, 합덕읍 의용소방대, 합덕읍 여성의용소방대, 합덕읍 새마을지도자회, 합덕읍 새마을부녀회, 합덕읍 농업경영인회, 합덕읍 농촌지도자회, 합덕읍 바르게살기협의회, 합덕읍 개발위원회, 남당진 청년회의소, 합덕읍 적십자봉사회, 합덕읍 엄마순찰대, 합덕읍 체육회, 합덕라이온스클럽, 합덕읍 생활안전협의회, 합덕읍 생활개선회(총 19개소)

자료 : 당진시 내부자료(2021)

<표 2-16> 합덕읍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내용
사회적기업	(주)버그내	합덕읍 신촌로 6	순례객 대상 여행업(농촌체험마을), 건물청소 용역 및 소독
	노르웨이숲	합덕읍 삼거1길 23-2	농·임업품 생산, 가공 및 유통
협동조합	환경마을학교	합덕읍 충동길 36-1	환경교육 및 소독방역사업

자료 : 당진시 내부자료(2021)

- 합덕읍에 있는 합덕수리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월평균 2,200여명으로 최근 1년간에는 약 3,0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관광 지식정보시스템)
- 신리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은 2014년 대비 2019년에는 33.3% 증가하였으며, 솔피성지는 2018년 대비 2020년에는 35.9% 감소함.
- 합덕수리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대비 2019년에는 44.1%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순례객이 급감하였음.
- 합덕성당, 솔피성지 등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해 있어 합덕전통시장, 합덕수리박물관 등과 연계할 경우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음.

〈표 2-17〉 합덕읍 방문객 현황

구분	방문객수			
	2014	2018	2019	2020
신리성지	9,000	13,000	12,000	
솔피성지	-	183,804	254,761	121,397
합덕수리박물관	38,658	43,836	55,724	32,179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21)

4) 개발여건

-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천안고속도로(예정) 등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32호 및 40호, 국지도 70호와 인접하여 간선도로망 구축이 완료되어 향후 대산항 인입철도 및 동서횡단철도 연결시 교통 요충지역으로 성장이 예상됨.
- 합덕역 인근은 평균표고 30m, 경사도 10도 미만,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개발 또는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나 대부분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시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함.
- 합덕역사 주변으로 합덕 도시지역, 합덕일반 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등 배후지역 개발이 진행중이나 산업단지는 입주율이 저조하고, 미개발 도시지역이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활성화가 저조하고, 사유지 비율이 높으며 기획부동산 등으로 토지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개발에 따르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됨.

제3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상위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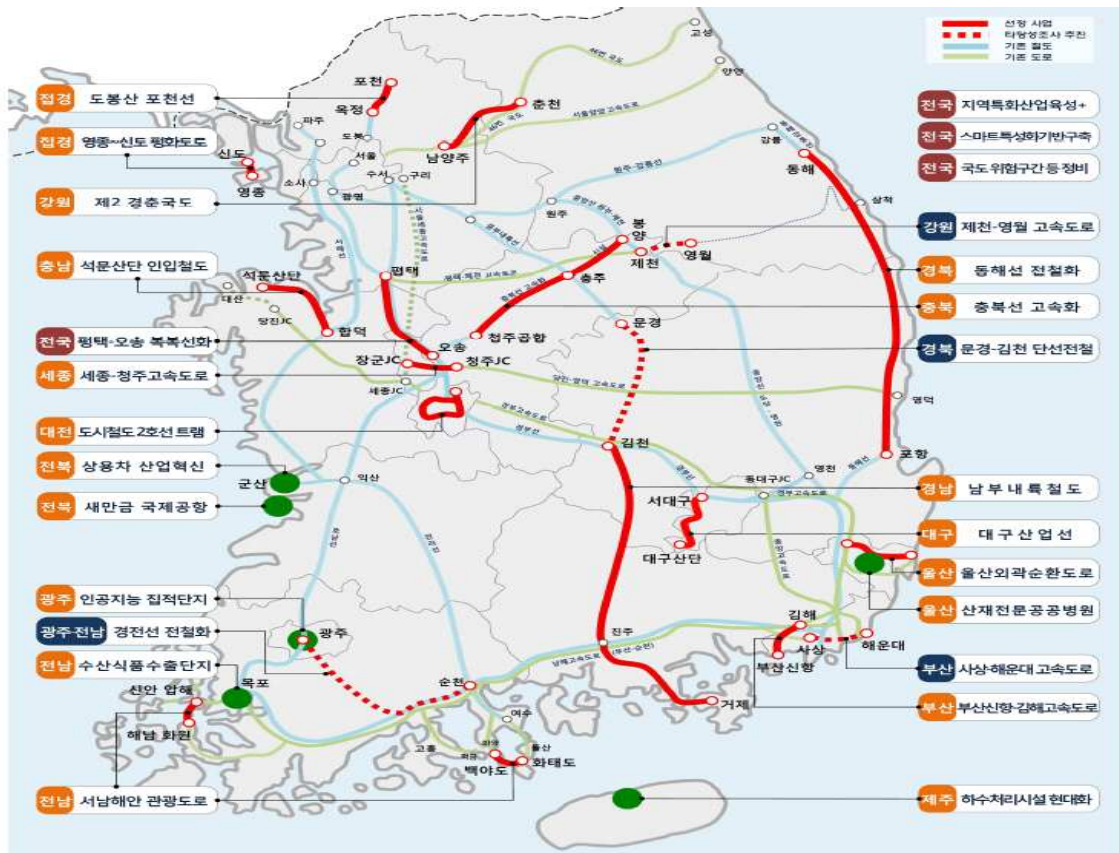
1)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3대목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계획적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발전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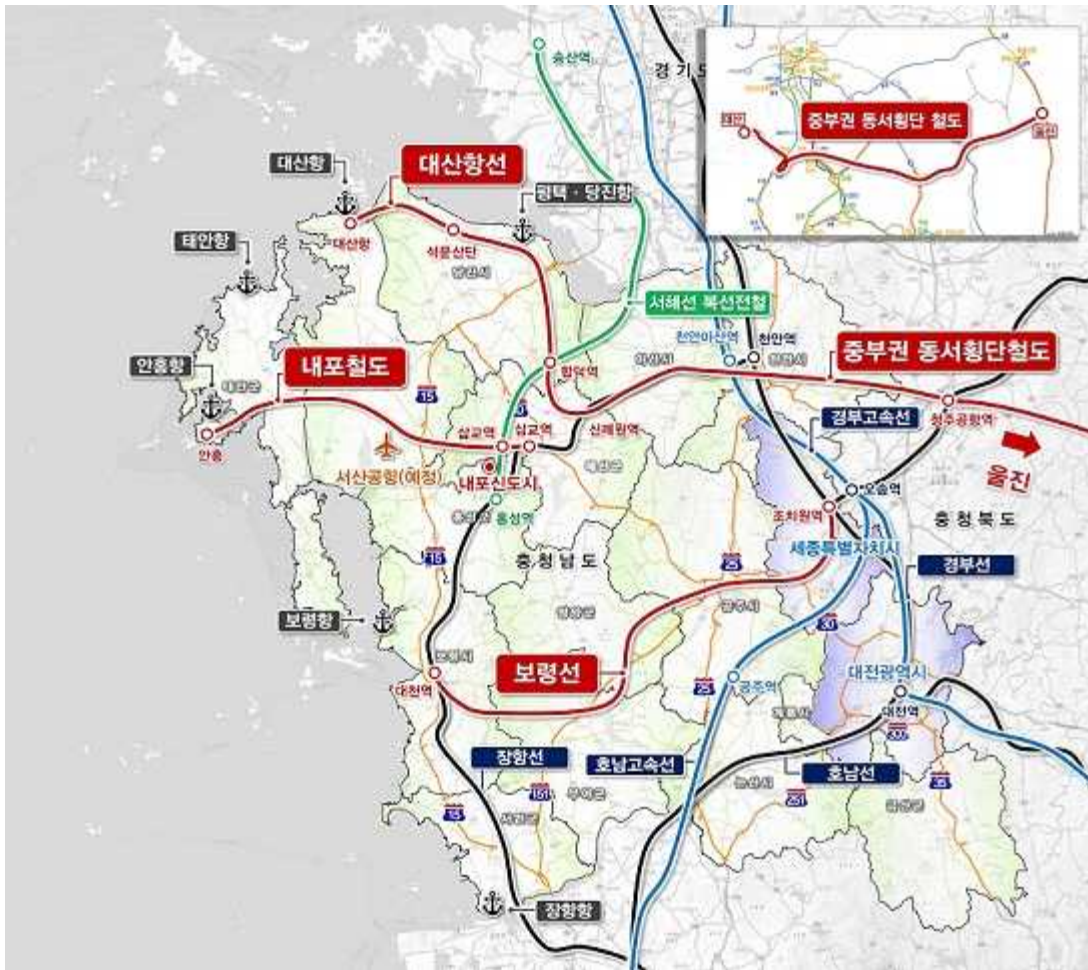


〈그림 3-1〉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 추진전략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치 -소규모그룹 홈케어 방식의 지역친화적 노인 돌봄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기능 및 치유 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
혁신·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	-북부권 인공지능·빅데이터 지원 및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천안아산 R&D집적지구,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육성 -국가 기간산업 구조 고도화 -서해안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및 해상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내륙권 농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남부권 군문화 활용 밀리터리·한류우드, 국방국가산단 등 국방과학 클러스터 육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교문화권·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 활성화 -천수만 자연공간 복원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산줄기·물줄기를 연결한 그린인프라 구축



<그림 3-2> 서해안권 철도개발계획

○ 서해안권 개발목표

내포신도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 도시권을 육성하고 환황해 직교류 교통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수소도시 및 수소자동차 부품 생산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검토 -고속도로 동서축 간격 정비(4-1, 2축), 대산-이원 연육교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보령선·대산향선·충청권 광역철도 등 환황해 경제권 철도인프라 확충 -서산공항 민항 유치 -보령신항만 건설 등의 사업
--	--

2)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전략	내용
포용적 경제 일자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포용과 혁신기반의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 농림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해양수산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및 자원관리	미래 지속을 위한 건강한 자연환경 확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생활환경 조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환 등 4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수행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인구감소시대 도시생활공간 조성, 읍·면 중심의 지역 맞춤형 토지이용관리, 충남형 스마트도시 조성, 총체적 지역사회 재난 관리 여건 조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서비스 제고, 교통복지 증진 및 친환경·첨단교통·물류기반 구축
더불어 누리는 지역 발전기반 강화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농촌 육성, 풍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안전망을 구축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개발



〈그림 3-3〉 충남권 개발계획

- 공간적으로는 서해안권, 북부권, 금강권 3대 균형발전 권역과 북부스마트산업권, 충남혁신도시권, 해양신산업권, K-바이오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 5대 산업발전 권역 등 계획권역을 유연하게 구상함으로써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활성화함.

권역별	내용
서해안권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권으로 설정해 동서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고, 국제해양관광 및 국가기간산업지대로 육성할 계획
북부권	천안·아산시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권을 형성해 스마트 지식산업 지대로 발전
금강권	공주역을 호남 상생 발전의 축으로 활용하고 국가행정기능 분담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지대로 육성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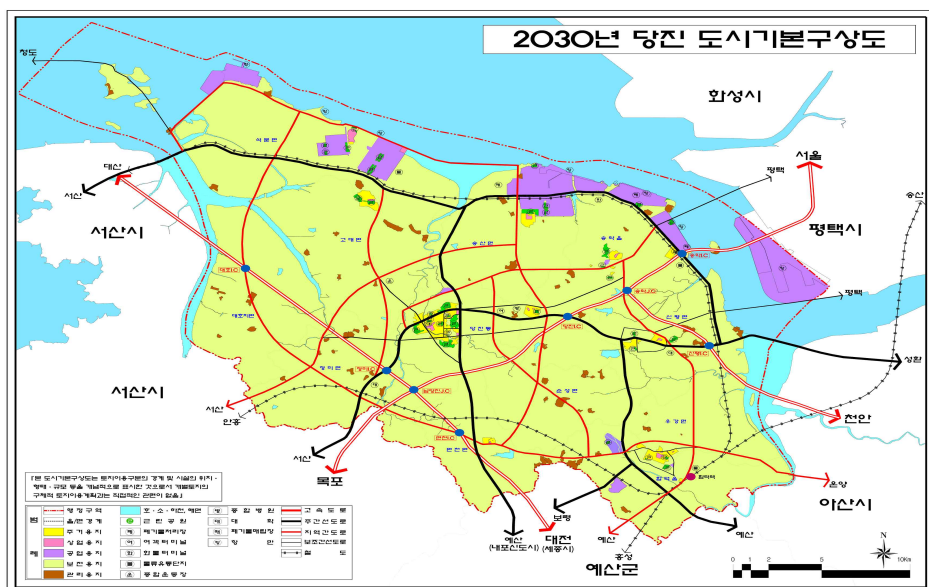
2. 당진시의 발전계획 검토

1)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 시정목표

- | | |
|---------------|-------------|
| - 시민참여 열린시정 | - 풍요로운 당진경제 |
| - 함께 잘 사는 농어촌 | - 품격있는 교육문화 |
| - 더불어 누리는 도시 | - 조화로운 생태도시 |



<그림 3-4> 2030년 당진 도시기본구상도



<그림 3-5> 2030년 당진시 개발계획도

- 환황해 중심 항만도시로서 지역간 연계 고려
- 하나의 당진 실현을 위한 도심 강화기능 수행



- 철도망계획
- 석문산단 인입선(101정거장 - 석문산단)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 송산포승 단선철도 신설 :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철도우회노선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설

○ 환승체계 확충

- 남북 환승거점 마련 : 석문산단역(가칭) ~ 당진터미널 ~ 101정거장(가칭)



○ 주변도시와의 연계성과 광역접근성 고려 : 충남 서북부권 교통·물류 요충지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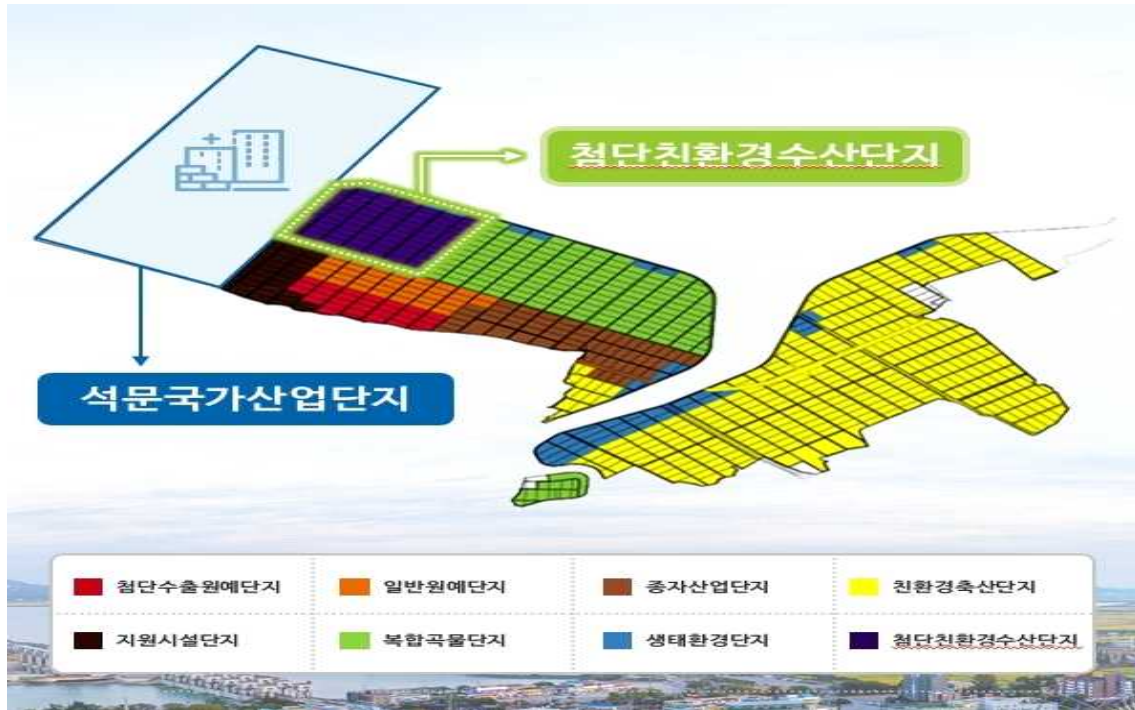
- 도로망 계획

- 당진~태안,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신설 및 당진~천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추진
- 내부 간선도로망 신설 및 확포장
- 2개 순환도로망 구축
- 정미나들목 ~ 남부로 연결도로 신설
- 3개연륙(도)교 추진 및 신설 : 신평~내항, 도비도~난지도, 송산~우정

2) 석문산단 계획

- 친환경 수산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향후 석문간척농지의 어업적 활용을 통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장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의 집결구조인 충남형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 수산 식품산업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그림 3-6〉 석문산단 친환경수산단지 계획도

3) 합덕읍 미래발전계획¹⁾

(1) 미래전략산업 육성

■ 합덕읍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구분	내용
친환경산업	친환경 역사·문화 산업 기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참여경제	지역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및 시설 구축
랜드마크건설	머그내순례길, 합덕제, 체험마을 등을 잇는 관광인프라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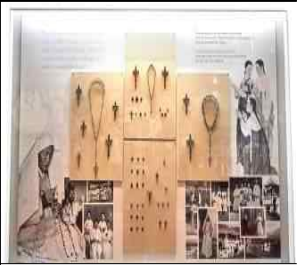


〈그림 3-7〉 미래전략산업 육성 활성화 구역

1) 당진시 읍면동 미래발전계획안, 내부자료

사업명	합덕제(연호방죽) 복원사업	
사업목적	○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이자,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합덕제를 활용한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관광도시화 ○ 버그내 순례길(솔피성지~합덕성당~신리성지)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성동리 일원 ○ 규 모 : 30만평(기존 8만평) ○ 기 간 : 2022~2027(5개년) ○ 내 용 : 농촌테마공원, 연꽃·수생식물 체험관, 힐링쉼터    농촌테마공원 연꽃수생식물 체험관 힐링쉼터	
	○ 추정예산 : 약 300억 원	
사업세부내용	○ 합덕제 복원 사업으로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재조성 -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 위한 체험관, 박물관, 성동산 힐링쉼터 등 ○ 버그내순례길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당진의 10경으로 지정 - 성소마을과 연계 숙박(홈스테이 등)이 가능한 관광지로 부각	
사업기대효과	○ 합덕제 관개시설 등의 역사성 재조명과 새로운 농촌관광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테마공원과 체험장, 산책로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기타	합덕제 현황 및 계획도 	

사업명	폐교(구,홍덕초교)를 활용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사업목적	○ 폐교를 쾌적하고 매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시설의 중·장기적 활용계획 및 지속적 관리로 효과성 제고		
사업개요	○ 위 치 : 함덕읍 옥금리 구 홍덕초교 ○ 규 모 : 15, 898m²(건축면적 : 934.18m²) ○ 기 간 : 2022~2025 (3개년) ○ 내 용 : 농촌체험 휴양마을, 캠핑장, 놀이공간조성 등  인성학교  시니어 목공예 클래스  가족단위 캠핑장		
사업세부내용	○ 농어촌 인성학교(현장체험 학습 시설) - 농사체험, 생태체험, 문화유산 등 탐방 프로그램 제공 ○ 버그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 해수풀 물놀이장, 사계절 썰매장(레일썰매, 물썰매) 등 인공적 요소를 배제한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조성 -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BBQ시설 등 제공 ○ DIY 목공예 체험·전시장 조성 - 생활목공 체험장·전시장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유아 및 청소년,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운영 - 시니어 위한 치매예방 기관합동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대효과	○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청년과 은퇴한 시니어들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 힐링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상설화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명	합덕성당과 신리성지를 활용한 성소마을 조성		
사업목적	○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천주교 성지가 지역경제와 효과적으로 밀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순례길과 더불어 천주교 역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 하려는 노력이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성당, 신리성지 ○ 기 간 : 2022 ~ 2025(4개년) ○ 내 용 : 홈스테이 마을(사제의집), 테마가 있는 순례길 조성 ○ 추정예산 : 약 2억 원		
	 순례길 방문객의 문화향유공간	 지역공동체와의 어울림 공간	 사제들의 역사 공간
사업세부내용	○ 지역 맛집, 전통시장(버그내), 순례길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여행 루트 개발 ○ 성당과 성지가 어울어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관광객을 위한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적 성소마을조성 - 숙박시설(홈스테이), 카페, 맛집 등 마을공동체 운영		
사업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위주로 편중된 소득원을 다양화 ○ 내포문화권에 포함된 천주교 문화지역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상권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 합덕전통시장과 중앙상점가 등 골목상권 쇠퇴로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과 연계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관광객이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운산리 255-12번지 일원 ○ 기 간 : 2022~2024(3개년) ○ 내 용 : 문화콘텐츠개발, 대표상품개발, 디자인 접목등 ○ 추정예산 : 18억원
사업세부내용	○ 지역특색(합덕제, 수리민속박물관, 농촌테마공원, 합덕성당, 신리성지, 성동산, 솔뫼성지)을 살린 투어코스·체험·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 ○ 시장의 대표상품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판매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구상 ○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 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시장 방문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 추진
사업기대효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주변상권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시가지 전체 활성화 도모 ○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코스 개발

(2) 도시공간 조성

■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



구분	내용
삶의질 향상	도시재생, 생활SOC 구축을 통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생태주거도시	자연·생태와 어우러지는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교통의 중심지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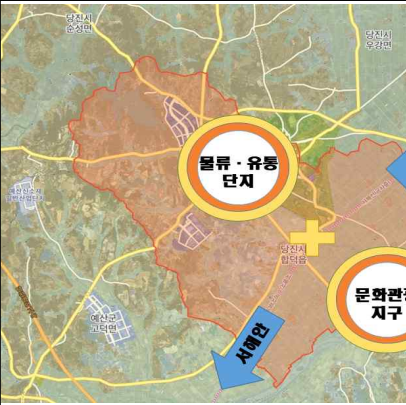


〈그림 3-8〉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사업명	합덕읍 계층 통합형 문화부흥 프로젝트			
사업목적	○ 세대 너머, 계층 너머, 청년-외국인-다문화-소상공인이 함께 만 들어가는 합덕 르네상스 프로젝트 ○ 소규모SOC와 결합한 지역주민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 개발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운산리 255-12번지 일원 ○ 규 모 : 158,000m² ○ 기 간 : 2020년 ~ 2023년 ○ 내 용 : 계층 통합형 공유경제 도시재생 프로젝트     청년 아이디어 공유공간 다문화 공유공간 청소년 공감센터 전통시장 활력공간			
사업세부내용	○ 청년 아이디어 공유공간 SOC ‘버그내 크리에이티브 랩’ - 읍민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청소년 창작공간 - 오픈플랜 스튜디오, 아이디어카페, 메이커스페이스, 3D 오픈랩등 ○ 다문화 어울림센터(다문화-지역여성-노년층 커뮤니티) - 문화, 음식,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청소년 공감센터 - 4차산업혁명 교육(VR교육, 드론, 3D프린트), 멀티미디어공유공간 ○ 전통시장-소상공인 활력과 재생 공간 -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현대적 교육공간, 노후상가리모델링			
사업기대효과	○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혼재하는 합덕 도시재생지구의 공존과 통합·공유의 고유 공간 조성 ○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공동체 발굴 및 육성의 생태계 정비			

사업명	남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목적	○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주민정주의식 고취 ○ 열악한 남부권 생활체육시설 해소 및 종합체육을 벨트화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운산리 남부문화스포츠센터 부지 일원 ○ 기 간 : 2022~2025(3개년) ○ 내 용 :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 추정예산 : 50억원
사업세부내용	○ 기존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과 확충 체육시설(축구장 등),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 체육공원으로 조성 ○ 쾌적한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 다양한 구기종목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조성 - 접근성 개선과 시설현대화로 생활체육시설 이용률 제고 ○ 테크산책길, 놀이시설, 화장실 등 공원조성으로 시민에게 쉼터, 여가활용 공간 조성되어 주민복지향상 도모
사업기대효과	○ 생활체육 대회 등 체육교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도모 ○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명	하운·운곡지구 전원주택지 조성		
사업목적	○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하는 기업체 임직원, 단독주택 선호자, 귀농인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개발 ○ 양질의 주거지 조성으로 단독주택 수요자의 인구유입효과 및 지역활성화 기대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하운리, 운곡리 일원 ○ 규 모 : 10만평 ○ 기 간 : 2022~2026(5개년) ○ 내 용 : 생태주거단지, 마을숲, 커뮤니티공간, 공원 등 ○ 개발주체 : 개발사업자(기반시설 당진시 지원)    생태주거단지 여성친화 커뮤니티 쾌적한 휴식공간		
사업세부내용	○ 당진시 전원주택지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전원주택단지 개발 수요의 계획적 수용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및 당진시 전원주택 조성 기준 및 지원내용 마련 ○ 단계별 개발계획 및 방법을 고려한 체계적인 이용계획수립 ○ 타운하우스 근처 편의시설(대중교통 등) 및 교육시설 개발		
사업기대효과	○ 수도권 인접의 2만명의 정주여건을 갖춘 쾌적하고 풍요로운 합덕읍으로 변모 ○ 합덕제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부각		

사업명	당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목적	○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당진역 배후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 ○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으로 친환경적 정주 공간조성과 당진시 계획시설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당진역 일원 ○ 규 모 : 10만평 ○ 기 간 : 2022~2026(5개년) ○ 내 용 : 주거지구, 상업지구, 물류단지, 업무시설 등 ○ 사업방식 :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덕 새참거리  수도권과의 징검다리 역할
사업세부내용	○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시 수도권과의 근접성 극대화 이용 ○ 산업단지와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지역 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 합덕성당, 신리성지, 합덕제, 솔피성지, 면천읍성, 삼교천 등 ○ 훼손된 농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통합 지구 조성과 쇼핑, 문화 거리, 공연장 등 조성
사업기대효과	○ 남부권 발전의 초석이 될 도시개발 사업으로, 당진의 중심 상권으로 부각 ○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대도시 관광객 유치로 상권활성화 도모

(3) 지역소비체계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소비체계 구축



구분	내용
순환청정도시	비점오염을 막는 가축분뇨 순환형 자원순환 시스템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미래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및 고부가 브랜드로 일자리 창출
친환경산단	바이오·식·의약품제 및 친환경기업 등 지속가능한 산단개발



〈그림 3-9〉 지속가능한 지역 소비체계 구축

사업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사업목적	○ 가축분뇨 등을 에너지화하여 친환경 농업육성과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 ○ 비점오염의 주요원인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일원 ○ 시설용량 : 280톤(가축분뇨 200톤+축매 80톤) / 발전용량 6,000KW ○ 기 간 : 2022 ~ 2025 .(3개년) ○ 내 용 : 악취 없는 가축(소, 돼지, 닭)분뇨처리를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바이오에너지를 획득 ○ 추정예산 : 100억 <pre> graph LR A((가축분뇨 생산)) --> B((수거)) B --> C((플랜트 시설조성)) C --> D((지역 환원)) </pre> 비점오염저감 악취제거 시설구비 지역주민일자리창출 재생에너지이익공유 지역정주여건개선 지역에너지연료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세부내용	○ 합덕지역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구축 - 축산농가 참여 영농조합과 단체협의를 통한 대상지 발굴 ○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에너지화 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지역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연계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기대효과	○ 가축분뇨자원화로 깨끗한 환경과 정주여건 조성 ○ 재생에너지생산 이익 공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기여

사업명	합덕 전통음식 개발 및 향토전통음식점 발굴 육성
사업목적	○ 농촌체험관광 증가에 따라 지역문화, 관광지를 연계한 맛과 음식을 소재로 스토리를 만들어 전통음식의 관광자원화 ○ 합덕을 대표하는 향토·전통음식점을 발굴하고 음식의 전통성을 보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
사업개요	○ 대 상 : 전통음식 개발단체 또는 업소 ○ 기 간 : 2022. ~ 2027.(5개년) ○ 내 용 : 합덕 향토전통음식 발굴,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사업세부내용	○ 합덕 전통음식 발굴 - 특산물활용 개발요리, 떡류, 발효음식, 약선음식, 전통장류 등 ○ 합덕 8미 선정 - 곡물(떡류, 한과, 동동주 등), 민물요리(붕어찜, 추어탕, 민물장어 등), 특산물(연잎, 가공주스, 요거트, 쪽파 등), 채소과일류(사과·딸기잼, 꺼먹지 등), 기타(합덕국수, 서리태콩음식, 장류 등) ○ 전통음식 협의체구성 및 전수교육실시 ○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및 육성 지원방안 수립
사업기대효과	○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식문화자원, 식재료자원 등을 자료화하여 관광 콘텐츠화 ○ 우리지역의 관광과 음식이 어울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명	미래농업 육성
사업목적	○ 웰빙시대 다양한 소비 패턴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있는 품목 발굴로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스마트팜, 디지털 파밍 등 다양한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한 미래농업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일원 ○ 규 모 : 시범마을 선정(희망농가) ○ 기 간 : 2022 ~ (개년) ○ 내 용 : 기능성 농산물 확대, 신품목 선정, 특수작물 등
사업세부내용	○ 농가소득정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 등의 대응한 신기술 접목 - 단계별 시스템. 플랫폼개발과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우수인력 양성 ○ 소비자 기호변화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 체계 구축 - 지역특화품목 육성(딸기, 수박, 포도, 인삼 등) - 특이품목, 신품목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육성
사업기대효과	○ 농업이 직면한 생산비·노동력 절감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보급 ○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구조 개선

사업명	합덕인더스파크 바이오-친환경 확장 조성
사업목적	○ 개별입지 제한으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필요 ○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친환경 기업 적극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합덕읍 대전리 일원 ○ 규 모 : 당초15,898m² · 확장15,898m² ○ 기 간 : 2022 ~ ○ 내 용 : 바이오, 의약, 식품업체 ○ 개발방식 : 민간주도(인더스파크주식회사)
사업세부내용	○ 동아제약, 종근당 등 국내 굴지의 식·의약품 업체가 입주하여 향후 국내 산업수요를 감안한 계획입지를 마련하여 안정적 기업유치 기반마련 ○ 기존 개발사업자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추가 지정 및 조성·분양계획 확정 ○ 친환경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기대효과	○ 신규 고용창출 및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절감 극복 ○ 합덕읍 지역발전 거점조성과 경제성장 기반구축

4)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주민과 함께 다시 만들어 가는 AGAIN 합덕 1970²⁾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칭 : 주민과 함께 다시 만들어가는 again 합덕 1970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55-12번지 일원
- 면적 : 164,166m²
- 사업기간 : 2022년부터 2025년(4년간)
- 사업비 : 총 197.00억원
 - 마중물사업 : 152.17억원(국비 80.00, 지방비 53.34, 자체지방비 9.49, 민간 0.34, 기금 9.00)
 - 지자체사업 : 43.77억원(자체지방비 43.77)
 - 부처연계 및 공기업사업 : 1.06억원(부처연계 0.45, 공기업 0.61)

2)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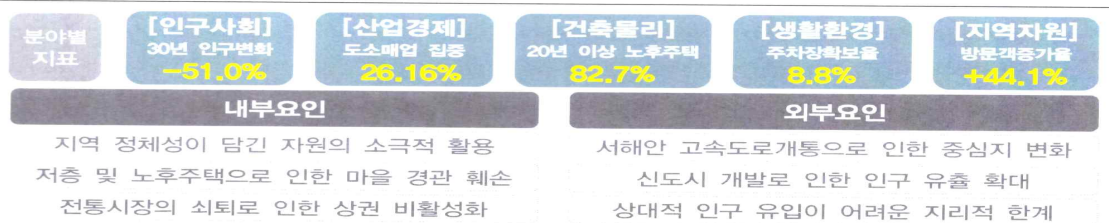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 분석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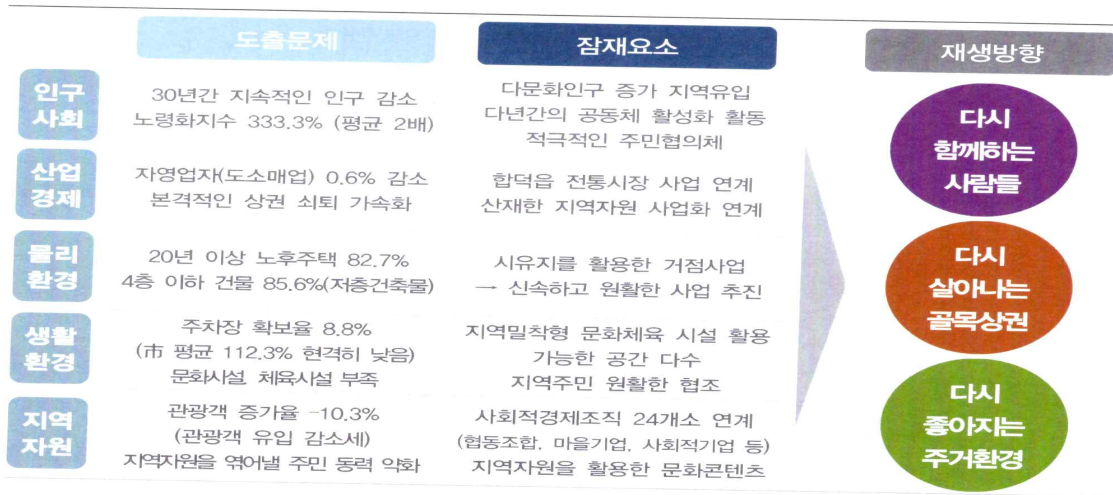
- 위치 :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55-12번지 일원
- 가구 : 760가구(2020년 집계구 기준)
- 건축물 : 20년이상 노후주택 82.7%
(저층 건축물 85.6%, 4층이하)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분석

- 3년간의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간담회(상인 청년 다문화)21회, 주민설명회 2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확보한 주민협의체 구성
- 2020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소마을 경관개선사업>과 2020년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수행 등을 통한 주민동력확보
- 탄탄한 도시재생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 도시재생센터 1개소, 현장센터 4개소 운영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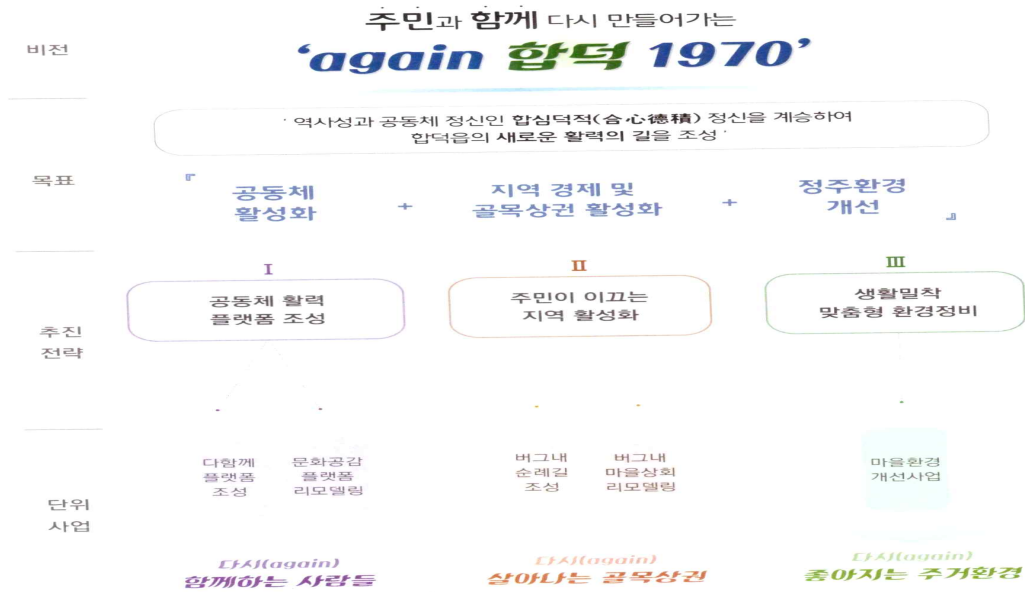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 「환황해 글로벌 항만도시 당진」
- 당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한 행복한 당진 재창조」
- 관련사업 : 아래와 같음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내용
1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천주교성지를 중심으로 순례길 조성 사업추진
3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 강소형 잠재관광지사업	-잠재관광지 활성화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입
4	문화체육관광부	합덕제 정비사업	-지역 전통의 행사를 재구성하여 지역활성화 기여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추진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사회서비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 노후한 경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주거환경 조성
-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민 주도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 사업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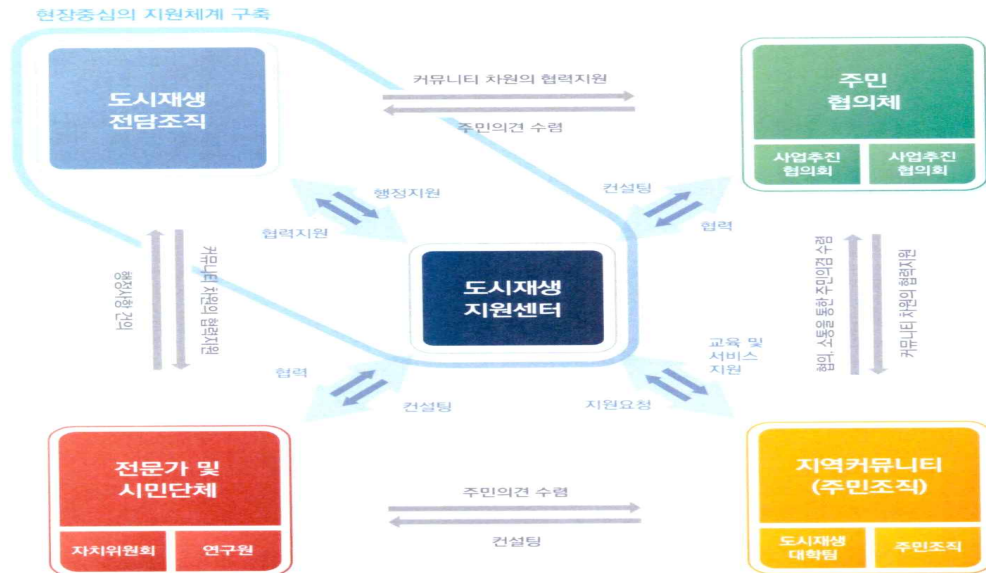


- 사업 유형별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A-1 다함께 플랫폼	다함께 플랫폼 조성
		· 주차장, 소공원, 주민거점공간을 복합화 하여 복합 커뮤니티공간 확보 및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 소공원 조성 2식, 포토존 2개소, 키오스크 1개소
		· 마을상생주차장 조성(승용차 32면, 버스 7면), 전기차 충전소 2기
		· 합덕읍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역할과 함께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마을환경개선, 합덕읍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S/W사업 진행
	A-2 문화공감 플랫폼	온누리 지원 프로그램
		· 지역 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교육 및 지역 내 정착 지원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역량강화
		· 주민 주도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공동체 강화사업 제언, 주민 기반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발한 사업 참여 기반 마련,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공동체 역량강화, 인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활동 지원 등
	B-1 버그내 순례길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화 과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화 및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문화공감플랫폼 리모델링
		· 문화플랫폼 및 마을카페 조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자체	B-2 버그내 마을상회	· 문화의 뜰 내 소공원(800㎡) 및 주차장(356㎡(16면)) 조성
		· 오브체 2개소 설치, 가로등 6개 설치
		바리스타 육성 및 메뉴 개발
		· 바리스타를 육성하여 마을카페, 마을축제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 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C-1 마을환경 개선사업	문화예술 역량강화
		· 문화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청년 문화 기획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 및 연대환경 조성
		플리마켓 운영
		· 주민 참여의 카부츠 베품시장, 버그내 마을상회에서 개발된 지역 특산물 판매와 함께 아트마켓과 체험워크숍 추진
	지자체	버그내 순례길 테마거리 조성
		· 솔의성지~신리성지에 이르는 버그내 순례길 코스 중 활성화지역 내 통과되는 순례길 L=320m를 버그내 순례길 테마거리로 조성
		·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 공간을 잇는 이음길 L=925m 조성을 통한 공간별 연계 확장
		전통시장 보행환경 개선
부처연계	지자체	· 합덕전통시장 및 한우특화거리 입구 화단 설치 및 시장 내부 LED 경관조명 설치 등 시장 환경 개선
		버그내 축제 운영 및 마을해설사 육성
		· 차 없는 거리, 농산물, 먹거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홍보 및 방문객 유치 도모하고 마을해설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Again1970 탐방루트 콘텐츠 기획
	지자체	· 1970년대 부흥했던 합덕의 역사와 주변 시장,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합덕만의 도보 탐방 콘텐츠 브랜드화
		버그내 마을상회 리모델링
		·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과 마을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 개발 한 재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을상회
		· 청년, 성인, 공동체 역량강화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랩실과 공유 주방을 조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공간 마련
	지자체	지역브랜드 및 공유부업 활성화
		· 지역정체성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브랜드 개발
		· 지역특산물 활용 소외계층 대상 도시락 배달 지원, 다문화 음식 교육 프로그램 진행
		청년창업 지원 및 상인역량강화
	지자체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모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역량교육을 진행 및 수료 과정을 진행하여 일자리 인큐베이팅 기회 제공
		· 골목상권 상인조직화와 상권분석 및 컨설팅 지원
공기업	지자체	안심골목길 및 유희부지 정비
		· 골목길, 외진 길 주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CCTV, 로고 잭터, 가로등 및 디자인 포장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
		· 텃터를 설치하고 교육·꽃·식재 등을 심어 삼지공원 조성
		집수리 지원 사업
공기업	지자체	·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집수리사업
		· 집수리단을 구성하여 반집 및 공폐가를 수리하고 마을 내 필요한 시설과 공간들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
		· 마을 목수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공 기술을 이용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능기부 및 집수리 지원활동 실시
		합덕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기업	지자체	·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여 마을 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교통 연결
		합덕읍 공원정비사업
		· 합덕 소들공원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공원시설물 도색 및 의자, 청자, 산책로 등 정비
		합덕제 연호문화축제
공기업	지자체	· 합덕 고유의 문화재 홍보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야간 점등식, 버스킹 공연, 기획 공연, 카누 체험 행사 등
		합덕수영장 건립사업
		· 합덕읍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여성친화도시
공기업	지자체	· 대상지 내 다문화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여성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여성일자리 창출, 온누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여성 활동 인큐베이팅 조성
		전기차충전소
		· 지자체 공공부지 주차장 대상 급속충전기 구축
		수선유지급여(단순위탁)
		· 사업지구 내 노후주택 개량 및 보수를 통한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합덕시장로 120-3, 105-3, (2동) 수선유지)

○ 사업추진체계 구성

-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5) 동남생활권 계획(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 발전구상

“다양한 테마가 있는 관광·휴양기능 당진”

□ 중심지·일자리 창출

○ 역사·문화적 지역자원 발굴로 체험·관광산업 육성

- 솔피성지~합덕제~신리성지로 이어지는 천주교 성지 유적지의 당진형 산티아고 육성
- 면천읍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기능 재정립으로 도시활력 증진

- 합덕, 면천, 신평 기존시가지의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도시기능 재정립으로 도시활력 증진 도모
- 마을(면천읍성) 역사기능 복원을 위한 인문도시 콘텐츠 발굴
-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조성으로 향만중사자 주거·여가기능 강화

□ 생활기반 확충

○ 서해선복선전철(101 정거장) 환승거점 육성

- 서해선복선전철(101정거장) 주변 복합문화공간의 역세권 기능 육성
- 101정거장 환승기능(여객, 물류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당진 도심 및 주변 시가지로의 접근성 강화

□ 지역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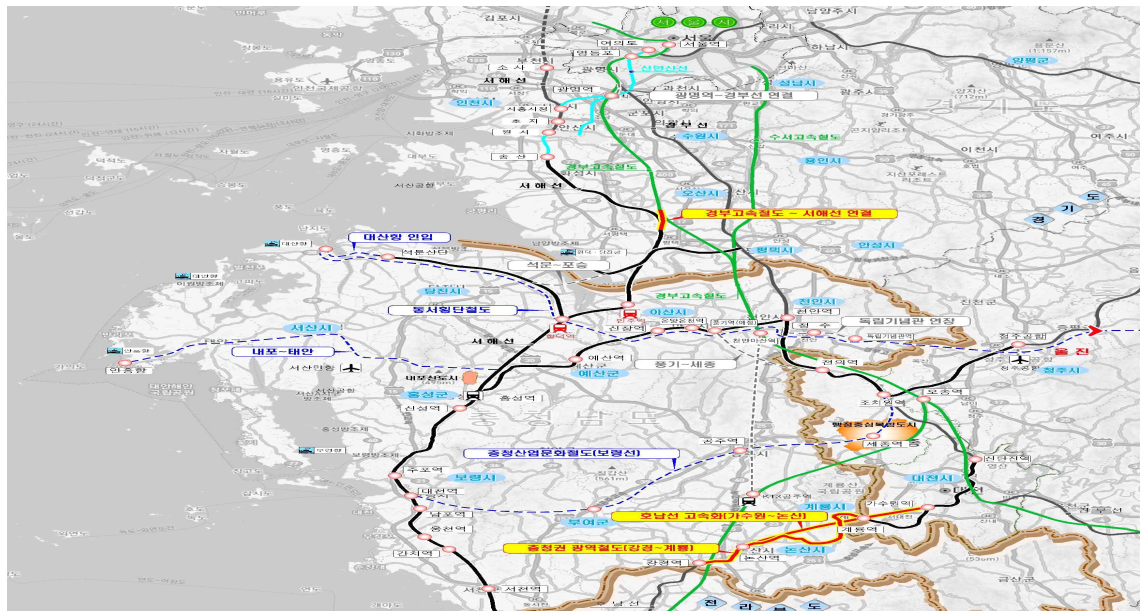
○ 해양테마 문화기능 강화

- 평택당진항 종사자 및 이용객 휴식·여가기능 제공을 위한 친수시설 조성



<그림 3-10> 동남생활권 발전구상도

6)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현황



<그림 3-1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4장. 역세권 도농복합형 도시재생방안

1. 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의 도농복합형 도시재생

1) 역세권의 도농복합형 도시재생방안

(1) 역세권 도농복합형 도시재생방향

- 고속철도 정차역 신설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매개체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도시발전을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인식
 -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을 위하여 타당성 및 개발수요의 다각적인 검토 요구
 - 지역의 자연적, 역사·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지역 개발 전략을 수립
- 당진시에서 추진한 ‘합덕역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발전시켜 중장기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
- 배후도시의 인구가 적고 중간역의 성격인 합덕역의 도시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화방안 마련 절실
 - 당진시관내 및 배후 산업단지 등과 연계되는 물류단지 건설 등 합덕역의 특색있는 정체성 부여 필요
 -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화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특성화 전략이 중요하며 민간투자를 위한 과도한 규모의 개발계획 수립은 지양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합덕의 경우 저층복합개발을 도모하는 등 차별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솔피성지, 합덕제 등 역사문화자원 개발로 관광자원 상품화
- 도로개설 및 교통시설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객 증가 도모
- 합덕역 주변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유치 등 역세권 배후기능 강화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개발근거 마련
 - 단기적 방안으로 합덕읍과 연결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역사 진입방향의 개발을 유도하여 역세권 배후기능 강화
- (2) 역세권 주변 현안 문제 해소
 - 간선도로(국도32호선, 국지도70호선)와 연계 도로망 미확보
 - 당진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시도7호선 승격을 통한 확장(4차로)반영

- 합덕읍 원도심에서 당진합덕역 정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망 계획이 없어 접근편의성 낮음.
- 미개설도로인 중로 1-308호선과 시도7호선(현 리도20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 합덕방향에서 당진역사로 직접 진입 가능한 출입구 부재로 합덕 원도심과 연계한 개발에 저해요소.
- 간선연계도로(리도205호선)과 역사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계획 및 통행로 설치
- 연간 이용객을 고려하지 않은 주차면수 확보로 주차장 부족 예상
- 합덕 방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역사 북서측인 합덕방향에 주차장 계획 필요



〈그림 4-1〉 합덕역 주변 개발계획

(3) 단기·중장기방안

가. 단기 방안

- 합덕역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국도 : 국토관리청, 지방도 : 충남도, 시·군도 및 농어촌: 시·군)
- 시외버스 등 현행 운행버스를 합덕역을 경유토록 조정 또는 추가노선 발굴
 - 관광객 및 이용객 등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책자 발급
 - 서해선 고속전철 개통에 맞춰 역사 주변의 시·군 관리도로를 정비하고 지방도 615호 4차로 개량 등을 통한 당진 시내에서 합덕역으로 접근성 개선
- 합덕역의 장점 집중 홍보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철도결절지 역사·문화자원 지역특산물 등 종합적으로 집중홍보
- 합덕역세권 종합 발전방안 수립을 통한 중장기 발전 방향 마련

나. 중장기 방안

- 대산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시 합덕역의 물류량 재산정 협의 등을 통한 물류 취급시설 기능 부여
- 합덕 도시지역 및 주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당진시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
 - 중심권기능분담 및 역사관광 전원주거 도청이전 신도시 배후기능으로발전
 - 지자체의 소규모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으로 마중물 부여
-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
 - 중앙정부에 동서횡단철도계획과 연계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지자체에 의한 나머지 역세권 개발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 등 민간 개발 유도책 마련(특례지원 등)
 -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표면적으로 국가 건설경기 침체로 2013년 지정 해제 되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으로 재추진 필요

다. 역세권 개발의 중·장기 과제

- 현재 당진합덕역에 물류취급시설 계획 미반영, 향후 합덕~대산간 철도건설 착수 시 물류량 재배분 계획 검토(한국철도시설공단)
- 합덕~대산간 철도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및 협의하여 물류량 배분 및 취급시설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물류취급시설 계획 반영 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 필요.

2) 역세권의 도농복합형 도시재생의 도입

- 역세권개발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지향형(TOD) 고밀 복합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음.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의 경우 배후도시의 인구와 도시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당진시의 경우 고밀복합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유럽의 도시들은 역세권개발시 고밀복합역세권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기성시가지와 연계하여 평면적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즉 역사와 역사주변의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전면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역사적 건물을 보전하고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기성시가지와 역사가 연계되도록 함.

- 따라서 당진시의 경우 역세권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고밀복합역세권 개발을 지양하고 역과 연계된 내부지역을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도시재생형 역세권개발 개념의 도입을 통한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역세권개발의 범위를 500m를 기준으로 확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방식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입 적용을 확대해야 함.
- 당진시의 역세권개발은 고밀복합개발보다 역세권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 서해안광역철도 역세권의 경우 주변 주택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변 지역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계획하고 기존 상권과 경쟁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기존상권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문화시설과 같은 상호보완적이거나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계획단위개발 개념 도입

- 당진시 역세권개발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도시의 역세권개발은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역세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계획단위개발제도(PUD)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특별계획구역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계획구역제도만으로 역세권을 개발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제도와 병행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 시가지정비·관리·보전 등을 목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형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전체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나의 계획단위개발(PUD) 개념을 적용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역세권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현대화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과 개별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 서해안 광역철도 역사 전면지역은 도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혼재되어야 함.
- 당진시의 경우 테마거리, 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쇼핑몰 조성을 통한 철도이용객의 원도심으로의 유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4) 역세권과 연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총괄관리자제도 도입

- 당진시 역세권을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 차원에서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 도시재생형 역세권개발사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함.
- 역세권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장기적인 추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광역적인 역세권 활성화를 민관산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방식으로 통합 조정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설계와 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를 총괄관리자로 선임하여 계획·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장기적인 역세권 및 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계획 수립 및 투자개발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자로서 총괄관리자의 선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TF팀의 구성 및 민관산학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는 필요할 경우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세부사업 지구별로 전담관리자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총괄관리자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역세권개발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투자기관과 민간투자자, 제3섹터방식의 출자회사가 참여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당진시의 경우 대규모 복합개발방식으로 역세권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의 확보가 곤란하여 민간투자자의 유치나 정부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재생형 역세권개발을 제시함. 도시재생형 역세권개발은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추진하되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타 개별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학협의체의 구성을 통하여 당진 합덕 역세권개발사업이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도농복합형 도시재생의 시설 도입방안

- 당진시의 경우 역세권의 이용인구와 화물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배후도시지역이 적어 고밀복합개발의 장점인 대규모 쇼핑몰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융복합한 개발방식의 도입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방식을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역세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이나 문화예술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거점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정부지원 공공서비스개발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당진 합덕 역세권은 해당 도시와 인접 시·군을 포함하는 권역단위 거점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역세권개발 시 도입시설에 있어서도 권역단위 거점기능을 도입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당진 합덕 역세권의 경우 주변 지자체 등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으며 거점시설로서 문화시설, 교통시설, 물류센터와 같은 물류·유통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거점시설은 주변지역의 상권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고밀복합개발 형식보다 원도심지역의 유흥지를 활용하여 건립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야 함.

2.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도시재생

1) 걷고싶은 길 만들기 - 버그내순례길

(1) 걷는 길 운영 사례³⁾

가. 제주 올레길 : 민간 중심의 종합적 운영과 관리

○ 제주 올레길 조성 및 관리·운영

- 사라진 옛길을 찾아 본래 모습으로 복원, 친환경적으로 접근
- 마을에 출발점과 종착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관리·운영

○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및 지원

- 지역주민 수익창출을 위한 ‘간세인형 공방 프로젝트’ 기획
- ‘1사 1올레’ 마을 결연사업 추진 : 무릉외갓집, 소녀방앗간
- 할망숙소 지원 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상품화 사업 추진 : 신산리 녹차 아이스크림, 세화3리 허브 아르마 캔들

3) 이영주(2017), 걷고싶은 강원도 길 - 관리 운영의 관점 -,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 642호, pp.6~8.에서 발췌정리

○ 교육사업 운영

- 최고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개방형 수업인 재능나눔 아카데미 배우명 나누명 운영

○ 걷기축제 개최

- 지역 부녀회가 제주도 재료와 방식으로 점심과 간식 제공

○ 수익 창출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념품 판매와 후원
- 올레스테이(게스트하우스) 운영
- 개인 후원과 더불어 ‘친구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후원 병행

○ 환경 캠페인

- 클린올레, 탄소발자국 지우기 캠페인
- 내 컵이나 물병을 가져오는 BYO(Bring Your Own) 캠페인도 운영



<그림 4-2> 제주올레길 지도

나. 경기옛길 : 도 차원의 걷는 길 통합 브랜딩

○ 경기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 경기도로부터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 받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가 실무 책임
- 옛길 유지보수, 테마탐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걷기대회·학술대회 개최, 옛길 활용사업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단 및 기자단 운영, 홍보사업 지원 등 실행

○ 무료 테마탐방 프로그램 운영

-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무료로 운영
- ‘옛길 프로그램’이라는 사업 타이틀 아래 역사탐방, 생태탐방, 산성탐방, 민속탐방, 예술탐방 등 다양한 형태의 탐방 진행 : 품격 있는 인문학 강의 진행

○ 교육 테마탐방 프로그램 운영

- 경기옛길 아카데미 운영 : 교육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자는 실내강의 참석 필수

○ 자원봉사단 운영

- 2014년부터 운영 : 지킴이(옛길 유지·관리)와 이쁨이(소규모 걷기 행사운영)로 구분



<그림 4-3> 경기옛길 6대로

○ 청년기자단 운영

- 경기옛길 공식 블로그에 청년기자단의 기사 공개 : 올해 모두 20대 청년으로 구성
-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우수활동자 표창 및 상품 수여, 수료증 지급, 멘토 초청 강연회 참석 기회 제공, 옛길 프로그램 참여 우선 혜택, 출판 연구서 제공, 기자단 명함 발급 등

○ 홍보거점 운영 지원

- 각 길의 홍보 거점은 숙박업소, 식당, 카페, 마트, 상점, 문화시설, 휴게소, 마을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 지하철역 안내데스크, 관광안내소 등 매우 다양
- 각 홍보 거점에서 안내지도 비치 및 탐방객들에게 경기옛길 정보 제공

다. 외씨버선길 : 4개 시군(강원도 영월, 경상북도 청송, 영양, 봉화) 간 지역협력

○ 외씨버선길 조성 및 관리·운영

- 4개 시군 공무원 파견을 통한 업무협력 : 공동출자 및 성과공유 시스템
- 구체적 실무는 (사)경북북부연구원이, 역량강화 지원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담당
- (사)경북북부연구원 내 BY2C 연계협력사업단을 두어 각종 업무를 수행

- 종합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센터 ‘객주’ 운영
 - 4개 시군 각각 1개소씩 운영 중
 - 휴식처 역할 + 외씨버선길에 대한 문화해설 + 기념품 판매 등
- 걷기행사 진행
 - 1박 2일 형태로 걷기 안전한 4~5월부터 10월까지 몇 차례 진행
- 주민참여형 기반강화사업 운영
 - 리더, 주민교육, 서비스교육, 해설사 양성교육 등 실시
 - 길 관리 매뉴얼 개발
- 공동홍보 및 마케팅 실시
 - 길 BI 및 캐릭터 개발, 기념품 개발
 - 외씨버선길 관광열차 운영, 지속적인 팸투어 및 스타마케팅 실시 등



〈그림 4-4〉 외씨버선길 안내도

- (2)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가. 길 브랜드 정립과 공식루트 선정
- 당진 합덕읍다운 장거리 트레일로서의 상징성 강화
 - 특정 루트로 선별하여 명품길로 구체화 필요
 - 어떠한 기준이든지 간에 당진 합덕읍의 역사문화, 자연환경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
 - 공식루트 선정 시 검토사항 몇 가지
 - 기 조성된 걷는 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충청남도, 경기도 등 광역단위 걷는 길과 연계성 감안

나. 탐방안내시스템 정비

<표 4-1> 탐방안내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설치지점

기능과 시설		세부 내용	설치지점	비고
안내 및 정보 제공	종합안내판	탐방로 및 주요 루트의 이름과 번호, 탐방로의 역사 등 탐방로 전체에 대한 정보 제공	시종점	
	탐방로명패	시종점의 탐방로 랜드마크 기능		
	자원해설판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스토리 텔링	노선상의 특정 지점	
	주의표시판	사고방지, 자연보호, 공공질서 유지, 이용 규제 등의 게재		통일화 우선대상
	게시판	계절적인 제한사항이나 일시적인 행사 등 가변적이거나 탐방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로운 형태로 게시	시종점, 휴식시설	
방향 유도	방향지시대	탐방로상의 특정한 지점에서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정보 제공	노선상	길 위계 표식 추가 부착, 통일화 우선대상
	표식	탐방로상의 표찰, 리본, 바닥표시 등으로 방향안내		통일화 우선대상

자료 : 충남연구원(2015)

다. 추진방향과 체계 결정

○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 충청남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지역 문화관광 관련 조직, 종교단체, 민간 도보단체, 지역사회 등 참여 범위 확대 및 유기적인 업무 분담 필요
- 문화관광 관련 조직들이 핵심 관리·운영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담당
- 민간 도보단체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형 마을단위 지원정책 검토
- 길 관리·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개별적 길 조성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다양한 사업화 방안 논의 및 실행

라. 중간조직과 자원봉사자 지원책 마련

○ 중간조직 구성

- 효율적인 중간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지금까지 다뤄지지 못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시행

○ 중간조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 지원책 마련

- 중간조직이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걷는 길 구간의 물리적 관리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캠페인과 행사 진행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보조인력이 필요

- 경기도나 제주도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보조인력으로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
- 당진 합덕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 부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성 검토 : 구간 개보수, 안전」위생,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일자리 창출

마. 앵커리지형 「길 위의 마을」관광자원화

- 걷는 길의 시점과 종점을 모두 마을에 바탕을 두는 것이 바람직
- 걷는 길 탐방객의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북돋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마을
- 앵커리지 기능을 담당하는 「길 위의 마을」관광자원화 사업 제안 : 시설 개보수보다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방향성 검토

바. IT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형 「Safe Trail」 제도 운영

- ‘안전’ 한 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 IT를 활용하여 인적이 드문 길에 대해 유인시설의 안내 및 관련 서비스 기능을 대체

<표 4-2> 선형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하드웨어 정비 및 조성	·트래커 및 바이커 문화휴식 공간 ·도보길/자전거길 내 ‘이야기가 있는 정거장’ 도입 ·차량과 분리하여 정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길 안내체계 정비 ·바이크텔 지정 및 조성
소프트웨어 기획 및 강화	·연계프로그램 및 투어코스 개발 ·선형관광자원 중심의 관광지도 제작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지자체 간 자전거투어로드 공동마케팅 ·TV 프로그램 연계, 홍보마케팅 강화
휴먼웨어 강화 및 네트워크구축	·도보길/자전거길 투어가이드 양성 ·동호회 지원 등 네트워크 구성 ·시군 문화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료 : 경기연구원(2016)

○ 「Safe Trail」 관련 검토 사항

- 방문객 모바일 기반 프로그램에 강력한 SOS 기능을 탑재 : 관련 앱에 기능 추가
- 걷는 길에 구비된 기존 시설물이나 랜드마크가 되는 지점에 SOS 구호신청을 보낼 수 있는 GPS 정보를 노출 : 전화통화로 자신의 위치정보 제공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Safe Trail」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책임 운영 :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

사. 종합적인 선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 다양한 선형관광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정책적 관점 필요

- 걷는 길 이외에도 자전거길, 레일바이크 등 선형관광자원 다수

버그내순례길
‘벗, 그대’

종교치유해설사와 함께하는 순례길 투어
순례길의 길동무가 되어드립니다.

■ 기간 : 11. 2. ~ 12. 10. (화~금)
■ 시간 : 14:00~17:00 내
■ 구간 : 버그내순례길(신리성지~함덕성당)
신청에 따라 변경가능

■ 참가비 : 무료
■ 인원 : 최대 7명(선착순 신청)
■ 신청방법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eogeunae>)
버그내순례길 ‘벗, 그대’ 신청게시글에
댓글로 신청

충청남도 2021년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그림 4-5> 당진 버그내 순례길 홍보자료

2) 국제 버그내길 아트프로젝트 : International Bugnae_gil Art Project(IBAP)제안

○ 취지

- 기후위기와 지역위기를 지구의 위기를 통섭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꿔어낼 수는 없더라도 지구와 지역을 구할 수 있는 실천의 고리를 찾아내야 함. 따라서 200년전 버그내 순례길 위에서 국제적이며 지역적인 초연결망을 통해 ‘지구를 구하는 길(道,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파일럿프로젝트를 제안함.

- 예를 들면, 천주교 서울둘레길-미리내순례길-버그내, 산티에고순례길-제주올레길-버그내 순례길, 자연과학-생명과학-미래과학-종교학-예술학

○ 누가

- 전세계 종교학자, 인문학자, 자연과학자, 예술가와 지역활동가 등이 함께 함.

○ 무엇을

- 자연, 예술, 삶의 순환, 순례의 의미를 다시 찾는 생태예술(에코아트) + 공공예술(퍼블릭아트) + 공동체예술(커뮤니티아트) 실행

○ 어디서

- 당진 합덕읍일대(버그내 순례길 : 솔메성지, 합덕성당, 합덕시장, 신리성지)

○ 왜

- 기후위기와 지역위기시대에 버그내 순례길의 글로컬리티적 의미를 전세계에 전파할 필요성

○ 어떻게

- 걸으며 행위예술과 예술행동을 통해 순례의 의미를 되새김

○ 기대효과

- 국제적 행사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순례길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중심
- 버그내 순례길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행위예술을 통한 의미있는 국제 문화 행사로 당진시 합덕읍이 문화중심의 계기가 됨.



<그림 4-6> 순례길 연결망 예시도

제5장. 인구유입확산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확충방안

1. 교육여건을 통한 인구유입

1) 대학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1) 대학설립유형별 검토

○ 대학설립은 크게 단일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과 공유(공동)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단일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

캠퍼스 유치 방안	- 시립대학교 신설 - 국립대학교 신설 - 사립대학교 신설 - 국내 대학의 당진(합덕)분교 유치
-----------	--

- 공유(공동)캠퍼스 유치하는 방안.

가. 국내 대학의 분교 유치

○ 대학의 분교와 캠퍼스는 법률적으로 차이

- 분교는 대학 명칭만 동일한 학교를 타 지역에 새로 개교한 것에 가깝고, 캠퍼스는 단지 대학의 일부를 위치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음○

○ 국내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안

- 국내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인가기준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제4항에 따르면 설립인가규정은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교 설립인가시에도 인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 즉, 당진시에 국·공립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교지,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립대 분교를 유치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표 5-1> 분교와 캠퍼스의 차이

구분		분교설립시	캠퍼스(위치변경)
법적근거		「고등교육법」 제24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7조
설립요건 적용여부	교사	필요	필요
		교사면적 산정시 학생정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 최소기준 1,000명	교사면적산정시 학생정원 400명 미만일 경우 최소기준 400명
	교지	필요	필요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부지확보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부지확보 단, 건축물 임차 및 부분소유일 경우 교지확보 ×
	교원	필요	×
	수익용 기본재산	필요	×

자료 : 「대학설립·운영규정」

- 예컨대, 학생정원 1,000명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정원이 각각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사기준면적은 인문·사회계열 2,400㎡, 자연과학계열 3,400㎡, 공학계열 4,000㎡, 예체능계열 3,800㎡, 의학계열 4,000㎡ 총 31,200㎡가 필요함
- 교지는 학생정원이 1,000명인 경우 교사기준면적 이상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31,200㎡의 교지를 확보해야 함.
- 교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교원확보기준의 50%를 확보하여야 하는바, 학생정원 1,000명 기준으로 각 계열별 학생정원이 200명인 경우 교원은 인문·사회계열 8명, 자연과학계열 10명, 공학계열 10명, 예체능계열 10명, 의학계열 25명 총 63명 중 50%를 확보하여야 함.
- 4년제 사립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300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 결과적으로 당진시에 국립대학 분교를 유치할 경우, 최소한 교사 및 교지면적 31,200㎡에 해당하는 부지확보 비용과 교사건축비용, 교원확보비용이 필요함.
- 반면에 사립대학 분교를 유치할 경우, 최소한 교사시설면적인 31,200㎡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확보 금액, 교사건축비용, 교원확보비용과 함께 300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표 5-2> 국내 대학의 분교를 유치할 경우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국내 유명 대학의 분교를 당진시에 유치하면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의 강의를 당진시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학위수여가 가능함 · 당진시에 국내 유명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경우 수도권과 공간적 제약이 있는 학생과 재직자를 고려하여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인재양성이 가능함
단점	- 재원 마련의 어려움 · 분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대학을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설립인가기준 및 인가절차를 갖추어야 함 · 사립대학의 분교 유치시에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교법인의 재정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교설립에 어려움이 있음

나. 대학 일부의 위치변경에 의한 공유(공동) 캠퍼스 설치

-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중요사항에는 첫째, 학교의 설립·경영자, 둘째, 설립목적, 셋째, 학교의 명칭, 넷째, 학교의 위치, 다섯째,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르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함.
 - 따라서 최소기준인 학생정원 400명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정원이 각각 80명이라면, 교사기준면적은 인문·사회계열 960㎡, 자연과학계열 1,360㎡, 공학계열 1,600㎡, 예체능계열 1,520㎡, 의학계열 1,600㎡ 총 7,040㎡의 교사기준면적이 필요함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학생정원이 400명 이하인 경우, 교지를 교사건축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사건축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표 5-3> 국내 대학 일부의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대학시설 및 분교를 유치하는 경우의 설립인가기준보다 대학의 일부 이전 시 설립인가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대학의 일부를 위치변경하는 경우, 학생정원 최소기준을 400명(일반 기준 1,0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사확보기준이 완화되어 해당 기준에 따른 대학 설치가 가능함
단점	- 공유(공동)캠퍼스 형태의 대학 유치가 어려움 · 현행 규정상 공유(공동)캠퍼스 형태의 대학 조성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공동캠퍼스 조성이나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함 · 현행 규정상 대학의 일부를 위치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대학이 입주하는 공유(공동)캠퍼스 형태의 위치변경은 어려움

(2) 대학설립 유형별 검토⁴⁾

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확보 곤란

○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지방대학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위협요인은 학령인구의 감소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학생 수 감소/미달은 대학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침
- 대학 학생 수 감소는 재정수입의 감소에 따른 교·직원 임금, 신규채용, 교육·연구 여건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수는 49만 3,433명이며, 2019학년도 수능응시인원 59만4924명에 비해 2년 만에 약 10만명 줄어들었음.
- 3년 뒤인 2024년까지 학령인구가 급감해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2024년 대학 입학 가능인원은 38만 4천명으로서 2021년 대비 10만 8천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출산율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령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4) 이은규(2017),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특성화 대학연구」, 울산연구원 보고서, 2017, pp.92~100에서 재정리.

-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예측으로 노무현정부 때부터 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지방대학 입학정원 30% 이상 줄었으며, 수도권 대학 정원은 동 기간 14.5%인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
- 특히, 서울의 경우 정원은 동 기간 10% 수준으로 감축함

나. 대학 재정위기로 인한 분교 및 캠퍼스 설립의 부담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재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대학은 재정위기를 직면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 10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고정지출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추진과 분교/캠퍼스 설립 추진은 힘들 것으로 판단됨

다. 정부의 정책방향

- 교육부 규제샌드박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송도 글로벌캠퍼스, 부산시 공유대학,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처럼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교육부는 1048억을 들여 신기술 ‘공유대학’을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2026년까지 신기술분야 10만명 인력양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을 위하여 대학설립 핵심요건인 교육과정, 시설, 교원은 물론 학생정원 규제까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아날로그 규제를 대폭완화 하고 21개 신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캠퍼스 없는 대학 운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검토하고 있음

라. 검토의견

-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는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필요
- 대학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교적 수도권의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며, 수도권-지방 대학 간 졸업생 임금, 직장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졸업생의 첫 직장 사업체 규모가 지방대학 사업체 규모보다 크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의 임금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교육의 서비스 역시 낮아질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학생수요 및 지역,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함

○ 위의 검토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공유(공동)캠퍼스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으로 판단됨

(3) 공유(공동) 캠퍼스 설립방안⁵⁾

가. 지역혁신의 기반의 지역대학 발전 필요성

○ 지역화 및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발전방향

- 전통적으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기존의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목적에 더하여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도 담당해야 함
-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가 강조되고 지역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대학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지역특성화 분야의 대학 캠퍼스 집적은 고급 인력 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특성화 중심 복수 대학의 특성은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공유(공동)캠퍼스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 설립

- 공유(공동)캠퍼스는 공공의 주도로 건립하여 국내외 우수대학에 임차하는 형식의 대학 모델임
-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산학협력시설, 지원시설(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기술사, 식당, 학생회관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
- 교육·연구·산학연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R&D 극대화,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공유(공동)캠퍼스는 대학, 연구소, 미래 신성장 산업을 묶는 산학연 협력의 선순환체계구축 기능을 수행함

5) 이경우(2020), 지역특화형 대학유치 전략연구, 울산연구원, pp.108~115에서 재정리.

<표 5-4> 국내외 유사사례 현황

구분	내용
인천 글로벌 캠퍼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근거하여 설립됨
경북 산학 융합 캠퍼스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및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캠퍼스이므로,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과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선행적으로 검토함
울산 산학 융합 캠퍼스	-울산 미포 및 온산 산업단지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산업 관련 업종이 집중되어 있어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이를 산업과 관련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이전시킴으로써 활발한 산·학·연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동캠퍼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임
두바이 국제 아카데미 시티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철저한 개방정책’을 펼쳤고, 외국대학 유치도 이러한 기조 하에 진행되었음
카타르 교육도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 중심도시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 14km ² 부지에 30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하여 교육도시를 건설함
싱가포르 WCU 프로그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재영입을 설정하고, 유능한 이민자 유치전략으로 WCU 프로그램을 시작함

자료 : 오덕성(2016), 공동캠퍼스 건립 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방안 연구,한국도시행정학회, 재정리

나. 공유(공동)캠퍼스 유형별 설립방안

○ 당진시 내 대학설립 유형과 관련하여 공유(공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당진시 내 일반산업단지 내로 국내 대학의 일부를 위치변경하는 방안, 둘째, 교지분리 규정의 규제완화에 따른 정원 자체조정을 통한 다원화 캠퍼스 조성방안이 있음

○ 일반산업단지 내로 대학 일부의 위치변경하는 방안

- 「대학설립·운영방안」제2조의7에 근거하여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방안을 통하여 공유(공동)캠퍼스의 설립이 가능함.

<표 5-5> 공유(공동)캠퍼스를 유치할 경우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일반대학 및 분교의 설립인가기준보다 설립인가기준의 최소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현재 정부가 대입정원을 축소 유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학 신설이나 정원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산업단지캠퍼스를 통한 공유(공동)캠퍼스 조성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임
단점	-입주가능 대학의 한계, 입주희망 대학 모집 등 공유(공동)캠퍼스 운영상 문제 · 산업단지캠퍼스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권역에서만 산업단지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권역 외에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대학의 경우 산업단지캠퍼스로의 이전이 불가능함

- 교지분리규정의 규제완화에 따른 정원 자체조정을 통한 다원화 캠퍼스 조성방안
-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학과의 인원과 시설 등이 이전하는 것이 분교 또는 대학 일부의 위치변경이라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동 규정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여야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자체조정하는 경우에 교지별로 기준면적 등을 충족할 필요가 없음
- 당진시에 특정학과의 공유(공동)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로의 대학 일부 이전과는 달리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인 경우 유치가 가능함
- 가능한 추진방식으로는 첫째, 기존 대학 내의 기존 전공학과(부)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방안, 둘째, 학과신설을 통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2) 초·중·고등학교를 통한 인구유입

(1) 초·중·고 학교설립을 통한 방안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2조) 등이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임.

(2)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⁶⁾를 통한 방안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

○ 비전과 목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학생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차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	▽	▽	▽
사교육비경감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격차해소 자유수강권 확대 및 소외지역 중심 문화예술 콘텐츠지원확대	운영주체다양화 지역사회 및 교육기부연계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행재정지원강화 방과후학교지원 센터 역할강화 및 교육청 책무성강화

- 방과후학교에 대한 전략은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함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운영근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

○ 방과후학교의 편성·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 운영
-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별도 계획을 수립·운영
-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음. 단,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가능(「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함

6) 2021 충남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동법 시행령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적절한 시수를 운영함. 주당 최대 200분(40분×5회 운영 가능한 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 정보공개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기회 보장,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하며, 단위학교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연 1회 공개함

○ 단위학교 지도·점검은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하고 컨설팅함.

○ 방과후학교 추진체계



2.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

1) 기본방향

- 광역 교통망과 시내 가로망을 위계별로 배분하고, 생활권 사이의 연계 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함.
-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연계교통망을 확립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체계 관리기법을 통한 교통시설물의 활용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교통체계(ITS), 간선급행버스체계(BRT)등의 다양한 선진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함.
-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고려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함.
-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교통 에너지 소비 및 환경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도모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함.
- 터미널,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통연계를 위한 주요교통시설의 도입을 검토함.

2) 기능별 가로망계획

(1) 도시내 가로망정비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교통망을 유지하되, 실현 불가능한 도로망은 현실화가 가능한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자전거도로계획

○ 자전거도로 조성목적

- 자전거 이용의 확대를 통해 교통정책의 문제 및 환경문제 등 해소에 기여함
- 자전거이용을 하나의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형성시키고 대중교통과의 연계 수단 및 시민건강증진과 레저 수단으로 유도함
- 자동차 교통수요 흡수 및 에너지 절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기본방향

- 생활권 단위의 내부도로망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를 계획함
- 자전거이용 목적을 고려한 동선체계 및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함
- 자동차 및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의 위험요소로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함

○ 자전거 도로망계획

- 자전거 도로망을 일상생활용 Network 및 레크레이션용 Network로 계획함.
- 각 목적별 자전거 이용경로의 통행패턴(통행거리, 통행수요)을 근거로 간선 및 집산/국지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여 최적 자전거 Network를 계획함.
- 일상생활용 Network는 생활권 내부 및 인접 생활권의 학교로 통학하는 경로를 검토하여 계획하고 통근통행 분포를 고려하여 자전거도로를 계획함.
- 또한 역세권 시설 주변의 자전거 이용 가능경로를 선정하여 집산/국지도도로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레크레이션용 Network는 레저·여가를 위한 장소로 합덕제, 버그내순례길과 주요 문화·역사·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이를 중심으로 계획함
- 기능별 자전거도로 Network는 간선 자전거도로 및 집산/국지 자전거도로로 구분함. 간선 자전거도로는 읍면계 유·출입 통행 및 레크레이션 통행, 도시내의 생활권간 자전거 통행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계획하며 자전거도로는 연결성을 확보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적인 도로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행자 및 차량과의 통행권 분리가 가능하도록 간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계획

- 자전거 이용목적은 일상생활용과 레크레이션용으로 나누어 기능별 위계를 갖도록 하며, 간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집산/국지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적용하여 계획함.

○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설치계획

- 공공주차장, 역사 주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시 자전거이용시설(보관소, 공기주입기 등)확보율을 높이도록 함

(3) 보행교통계획

- 쾌적한 보행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
- 보행도로상 노상시설물을 정비하고 유효 보도폭을 확보하며 보도 턱낮춤을 개선하여야 함.
- 보행자의 작동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확충
-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지속 설치 및 보행단절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함.
- 고령층 및 노약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및 복지시설 주변에 스쿨존과 같은 실버존을 설치하여 보행중인 노약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4) 주차장시설계획

○ 주차장 시설 정비방안

-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관리를 적정화하여야 함.
- 주차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의 공급에 우선을 두어나 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

○ 주차관리제도의 정비방향

- 주차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기존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자동차의 불필요한 주행을 억제하여야 함.
- 주차 관련 조례를 주차정책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관련 행정조직을 증가하는 업무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주차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을 증대하고, 향후 새로운 공영주차장 개발기능을 담당하도록 공영주차장 개발의 극대화를 추진하여야 함.

3. 이익공유제를 통한 인구유입

1) 이익공유제의 정의

-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서 이익공유체계(Benefit Sharing Mechanism, BSM)란 재생가능에너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규정한 협약을 의미함(Ernst & Young Australia, 2014).
- 이외에도 이익공유체계와 개념은 같지만 용어를 달리하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수익모델 등으로 정의되기도 함(이철용 김민지, 2015).
- 이익공유체계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이해관계자인 기업,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 주민이 공유 혹은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함.

2) 이익공유체계의 구성요소

(1) 이익공유 유형

- 이익공유체계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임.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봄으로써 주민수용성이 제고됨.
-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식에는 다음 표와 같은 형태로 분류됨.

- Rebel Group(2009)에 따르면 각각의 이익공유 방식이 환경문제, 넘비현상, 기회주의와 같이 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완화시키는 정도에 대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민소유권 소유 방식 혹은 현물 편익 지급 방식이 넘비현상과 기회주의를 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음.

<표 5-6>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익에 대한 유형

구분	유형	
Grant Allan et al.(2011)	기존 및 기타 자금 소유 방식(other and pre-existing funds)	
	주민소유권 소유 방식(community ownership)	
	공통적 이익배분 방식(equal distribution of revenues)	
	직접 투자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스활용 방식 (direct investment and project funding)	
	장학금 지원 방식(apprenticeships and studentships)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educational programmes)	
	에너지 가격 인하 방식(electricity discounts)	
	지역사회 이익공유 협약 체결 방식 (community benefit agreements)	
	공급사슬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적 이익 (Indirect benefits from the supply chain)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간접적 이익 (indirect benefits through tourist facilities)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 UNEP(2007)	수익금 배분(revenue sharing)	
	개발 기금(development funds)	
	지분 공유 및 주민소유권 소유(equity sharing or full ownership)	
	지역 사회로의 세금 환급 (taxes paid to regional or local authorities)	
	전기세 혹은 물 사용 부과금 등 에너지 가격 인하 (preferential electricity rates or other water-related fees)	
A c t i o n Renewables et al.(2015)	마을 기금(community funds)	
	현물 편익(benefit in kind)	
	지역 소유(local ownership)	
	지역 공급망(local supply chain)	
Ernst & Young Australia (2014)	지주에 대한 보상(payments to landowners) 방식	
	지역 소유권(community ownership) 방식	
	지 역 사 회 에 대한 보상	마을 기금(community enhancement fund), 전기세 인하(discounted electricity)
		지역 고용 및 조달 (local employment and procurement)
		생물다양성 영향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biodiversity impacts)

자료 : 이익공유체계가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2017),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경민, 석사논문, pp.7~10에서 발췌정리

- 한편 이익공유 유형의 정의는 다음 <표 4-2>와 같음.

<표 5-7> 이익공유 유형 및 정의

유형	의미
마을 기금 (community funds)	발전사업자가 지역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세금을 인하해서 지급하는 것
주민소유권 소유 혹은 공동소유(local ownership or co-ownership)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에게 보조금 혹은 지분을 제공하는 것
보상(compensation)	발전사업자가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
현물 편익 (benefits-in-kind)	현금이 아닌 물건의 형태로 발전사업자가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
지역 고용 (local employment)	발전사업의 개발 건설 운영 단계에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것
에너지 가격 인하 (energy price reduction)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할인된 가격 혹은 더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간접적 사회적 편익 (indirect social benefits)	발전사업이 지역 명망, 생태관광, 지식 등 지역에 다른 편익을 간접적으로 가져오는 것

자료 : 이익공유체계가 주민수용성과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2017),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경민, 석사논문, pp.7~10에서 발췌정리

<표 5-8> 이익공유 유형이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환경문제	넘비현상	기회주의
마을기금	+	++	+
지역소유	0	+++	++
보상	+++	+	0
현물 편익	+	++	+
지역 고용 및 조달	0	++	+
에너지 가격 인하	-	+	+
간접적 편익	0	+	-

자료: Rebel Group(2009)

(2) 주민소유권

- Ernst & Young Australia(2014)에서는 이익공유체계를 마을에 대한 보상 방식(payments to communities), 지주에 대한 보상 방식(payments to landowners), 지역공동체 소유권 소유 방식(community ownership)으로 나누어 봄.
- 여기서 마을에 대한 보상방식은 이익공유체계 유형에 해당하지만 지주에 대한 보상 방식, 지역공동체 소유권 소유 방식은 지역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

대해 주민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재생가능에너지사업자가 마을에게 주는 보상 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역소유권을 가질 때 의사결정과 소유권에서의 주민 참여 수준이 증가함. 주민소유권을 소유하는 방식은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 투자하고 일정 수준의 지분을 가지는 방식이므로 주민에게로의 보상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고 설명함.

- 주민소유권은 주민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가지는 자기자본비율과 계획·개발·운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민소유권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사업 계획·개발·운영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눔(Action Renewables et al., 2015). 주민참여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9〉 주민 참여 정도에 따른 수준 분류

단계	소유형태			주민참여	대표적사례
	민간투자	주민참여	형태		
1단계	100%	0%	상업적소유	제도 또는 행정적인 요구에 따라서 동의 등의 절차에 참여하는 수준. 경우에 따라 약간의 보상 또는 지원금 받음	• 지방보급 • FIT 제도하 사업
2단계	100%	0%	상업적소유	주민소유권은 없으며, 토지임대자로서의 간접적 역할 수행	• 가시리 풍력
3단계	50%이상	50%이하	공동적소유	주민이 부분적으로 지분 소유	• 없음
4단계	50%이하	50%이상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	주민이 자본조달 등 단지 개발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 행원리 풍력 • 제조사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5단계	0%	100%	지역사회 주민 주도 개발 및 소유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소유 및 운영을 함	• 없음

자료: Action Renewables et al.(2015), 이상훈·윤성권(2015) 재구성.

3) 이익공유체계가 적용된 사례

(1) 해외 사례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이익공유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독일, 영국,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으며(UNEP, 2007; Action Renewables et al., 2015), 비교적 한국, 아일랜드, 캐나다가 이익공유를 잘 하고 있는 사례로 나타났음(David Rudolph et al., 2017).

- 국내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조합원을 이루어 출자금을 형성하는 형태로 주민수익형 모델이 이루어졌으며 주민 직접투자, 마을기금, 마을 기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의 방식이 사용되었고 사업 자금은 기업체 기부와 사회적 펀드를 통해 마련되었음(국무조정실 외, 2014).
- 반면 독일과 덴마크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 간의 금전적 이익공유체계가 전고하게 형성되어 있음.
 - 독일에서는 제한된 유한 책임 회사가 주도하여 지역 소유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Centre for Sustainable Energy and Hassan, G.,2005).
 - 덴마크에서는 2009년 덴마크 재생에너지 법안(Danish Renewable Energy Act)에 의거하여 마을에서 4.5km 이내로 설립한 풍력발전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지분 20%를 소유하도록 하고 주민의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투자하고 발전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소유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 법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세금 인센티브를 조합한 법으로 풍력발전의 주민수용성과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음.
 - 호주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주민들과의 지역소유 방식을 통해 이익공유를 하고 있음. 주로 발전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마을 기금(community enhancement fund)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풍력발전이 설립된 토지의 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Ernst & Young Australia, 2014). 지불 매커니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지주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은 풍력발전기에 근접한 곳에 거주하지만 이익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켰음. 이처럼 주민소유권 소유 방식은 다른 인프라 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과는 달리 호주 시드니의 노스사우스웨일즈 지역의 사례처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에서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마을 기금 방식은 발전사업자가 풍력발전소당 연간 고정 금액량을 제공하거나 풍력발전의 이익의 비율(%)에 따라 지급됨. 또한 발전사업에게 이익 공유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익을 다르게 받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음(NSW, 2015).
 -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에서 주민들이 이익을 지속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육상 풍력발전에 대해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운영 기간과 MW를 반영하여 연간 최소 5,000 파운드(한화 약 750만 원)에 준하는 기금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Scottish Government, 2015). 이를 바탕으로 이익공유체계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0> 이익공유체계 유형 정리표

구분	UNEP (2007)	Action Renewables et al.(2015)	Ernst & Young Australia (2014)	대표적 사례
마을기금	개발 기금	마을 기금		스코틀랜드 스웨덴(Rätvik) 프랑스(Bouin Wind Fa
지역소유		지역소유	자금조달 및 보상	덴마크(Middlegrunden) 덴마크(Samsø renewable Energy Island) 스웨덴(Rätvik)
보상	세금환급			프랑스(Bouin Wind Farm)
현물 편익		현물 편익		독일(Solar Park rotenburg)
지역 고용 및 조달		지역공급망	지역고용	프랑스(Bouin Wind Farm) 독일(Solar Park rotenburg) 덴마크(Samsø Renewable Energy Island)
에너지 가격 인하	전기세 물 사용 부과금 인하		전기세 인하	독일(Solar Park Rotenburg)
간접적 편익	지분공유 및 소유			프랑스(Bouin Wind Farm) 독일(Solar Park rotenburg) 덴마크(Samsø Renewable Energy Island)

자료: UNEP(2007), Action Renewables et al.(2015), Ernst & Young Australia(2014),
오시덕·김인행(2015) 재구성.

(2) 국내사례

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도 - 중앙정부 제도의 혁신

- 신안군은 국내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10.5.제정) 및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2021.6.3.제정)에 근거하여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주민에게 공유하도록 함
- 그동안 산자부는 재생에너지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2017.1.6.)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참여 가능한 주민 자격을 발전소 주변 반경 1km 이내(풍력은 5km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5인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초기 투자금 소요비용이 높아서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음. (2018년까지 1개소, 2019년 6개소, 2020년 15개소에 불과. 2020년 국감자료)
- 이에, 신안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①100KW미만 농가태양광을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개발이익(채권은 투자금에 대해 연5.2% 수익보장)을 주민에게 공유하도록 하고, ②참여 주민의 범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여 태양광은 5km이내, 해상풍력은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되, ③이익배분은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보상의 성격을 포함한 합리적 배분 구조를 만들

- 아울러, ④참여주민의 자격을 신안군민으로 확대하되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차별화고 전입기간에 따라 권리인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전입이 지역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가 장치를 마련함. 특히, 만30세 이하는 즉시 50%의 권리를 인증해 주고, 이후 1년 경과25% 추가, 2년 경과시에는 100% 인증해 줌으로써 만30세 미만 청년층의 귀어촌을 적극 촉진하고 있음. 신안군은 돌아오는 청년들을 위해 어선임대 및 영농실습 등의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음.
- 또한, 신안군은 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REC추가분 0.2부분을 발전사업자가 주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⑥ 개발이익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⑦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발전원별 주민 1인당 최대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하여 신안군민 전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함

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도 효과와 의미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는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역 인구유입정책으로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

-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관련 경관문제, 산지훼손 등 각종 불편과 민원은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인 128곳에 달하는 곳에서 재생에너지발전소 설치시 도로 및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속에서 신안군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
-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도는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개발이익 공유제도로 평가됨. 한국에너지공단 주민이익공유제도팀에서는 신안군 사례를 참고로 하여 주민이익공유제도를 전기연구원에 연구용역중임

○ 지역소멸의 대안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에 따른 1차 배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이후,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귀어촌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7월에는 7년만에 39명의 인구가 증가함.
-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와 함께 14개 읍면 24개의 미술관, 박물관 및 복합문화관광타운 건립을 위한 1도 1뮤지움 사업을 추진해 저녁노을미술관, 조희룡미술관, 1004섬수석미술관 등 12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현재 추진 중,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을 위해 1섬 1테마 수종을 식재하여 바다위 정원을 만들고, 섬에 색을 더한 지역별 색채사업인 컬러마케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기본소득제의 실험

- 현재 신안군에는 8.2G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 완공시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5만명에게 연간 600만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이익이 결합되면 지역에 따라 연간 최고 1200만원 수준의 신안형 기본소득제를 실현할 수 있음

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도 과제

○ 첫째, 중앙정부의 제도 개편

-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주민공유제도는 주요한 수단이며, 정부도 2014년부터 관련 제도 정비를 해 왔으나, 현장과 괴리된 기준으로 인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함
-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신안군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중인 바, 주민수용성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현실성 있는 제도 개편 필요함
- 재생에너지 개발시 주민참여 범위를 최대 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비중별 추가 가중치를 최대 0.5까지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주민참여 범위 및 방법도 1인이 독점할 수 없는 협동조합에 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시하여 공익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선 필요
- 아울러, 기본지침 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필요

○ 둘째, 참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필수

- 현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조합형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방식, 발전이익 배분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의 의미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관련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인식 존재. 참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설계 필요

○ 셋째, 지역소멸의 대안이 되기 위한 조건

-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를 통해 해당지역 인구 유입효과를 설명하고 있음. 태양광발전소 이익공유제가 실시된 안좌면 안좌도, 자라도의 경우에는 지역과 연계가 있는 친인척 혹은 출향인들 가운데 귀향, 귀촌을 문의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다만, 신안군 전체 인구는 여전히 감소추세여서 태양광발전소 추가 완공 및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 아울러, 신안군 청년마을 관련 지역정착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에 일부 문제가 제기되는 바, 지역소멸대안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융합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1. 산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현황

2020.11.1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후 시행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며, 지자체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여 REC 가중치를 추가로 최대 0.1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함

2020.9.4.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

< 주민주주 지원사업 개요 >

- ❶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
- ❷ 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 :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 ❸ 신청기간 : 20.9.3(수)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 덴마크는 풍력사업자가 시설 4.5km 이내 거주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당 5계좌까지 소득세 면제(5계좌 이상은 40% 면제)
- *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 73GW 중 약 46%(33.5GW)가 주민발전소 (12년 기준)
- * 18년 이후 RPS 대상설비 40,611개 중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22개에 불과
- * 400MW 해상풍력 단지 기준(총사업비 약 2조원) 주민투자 400~800억원 필요

□ 산업부는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

- *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 중이나, (2020년 기준)
 - *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

-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태양광, 풍력)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 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41호 (제2018-130호 개정) (2019.3.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14.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을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¹⁾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2	1.2
		100kW부터 3,000kW이하	$\frac{99.999 \times 1.2 + (\text{용량} - 99.999) \times 1.1}{\text{용량}}$	$\frac{99.999 \times 1.2 + (\text{용량} - 99.999) \times 1.2}{\text{용량}}$
		3,000kW 초과부터	$\frac{99.999 \times 1.2 + 99.999 \times 1.1 + (\text{용량} - 3,000) \times 0.8}{\text{용량}}$	$\frac{99.999 \times 1.2 + 99.999 \times 1.1 + (\text{용량} - 3,000) \times 0.9}{\text{용량}}$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0.8	0.9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	$\frac{3,000 \times 1.5 + (\text{용량} - 3,000) \times 1.1}{\text{용량}}$	$\frac{3,000 \times 1.5 + (\text{용량} - 3,000) \times 1.2}{\text{용량}}$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 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2014.9.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9. 12. 고시.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함.

< 현행 >

가중치	설치 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일반	5개 지목*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
1.2			~ 100kW
1.5	건물, 수상		

< 개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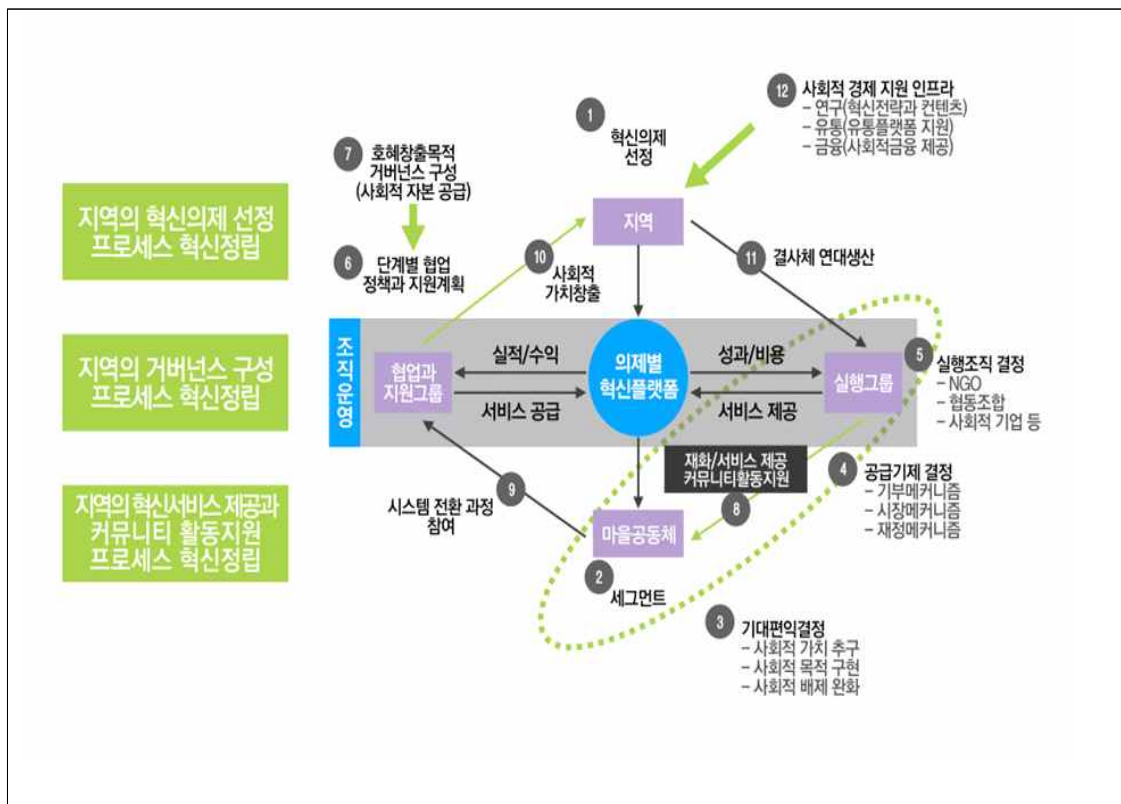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중규모 (100kW~3MW)	대규모 (3MW~)
일반	1.2	1.2+1.0	1.2+1.0+
건물	1.5		1.5+1.0
수상	1.5		

(예) 일반부지에 500kW 설치 시 가중치 적용 : [100kW×1.2(소규모)] + [400kW×1.0(중규모)]

2) 포괄적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자산화

- 민간의 칸막이가 행정의 칸막이 보다 견고하다고도 함. 따라서 초기부터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느슨한 연결망 속에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여 공동실천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함

(1) 포괄적 민간네트워크 지원



<그림 5-1> 주체와 수단, 문제 해결의 연결체계

- 포괄적 민간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비전 합의, 활동가들의 교류, 사회적 가치 학습, 지역공유자산화를 위한 협력 등 시민사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임.
- 포괄적 네트워크 육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공동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며,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관건임.
- 3년간 일몰 지원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의 컨소시엄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함. 민민거버넌스의 형성과 성장이 민관거버넌스의 발전에 결정적 충분조건임.

(2) 시민자산화 지원

- 시민자산화 지원은 사회적경제 상호거래를 통한 기금 조성과 같은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이 중요함.
-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지원과 특정 사업의 자산화 시범사업 지원과 같은 형태로 경험축적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민사회의 지역화폐협동조합 설립 등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지원
-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시민자산화의 내용이 결합될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로드맵

<표 5-11> 포괄적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자산화 운영 추진로드맵

도입기(2022~2023년)
포괄적 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실시
안정기(2023~2024년)
지역화폐,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실시, 지역공동체기금 조성, 공유공간 지원사업과 연계
전환기(2025년)
지역기금 10억 원 조성, 시민자산화 중기 전략 수립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충남을 수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진 서해선 복선전철의 당진 합덕역사가 2023년 개통되면 홍성·예산·당진(합덕)·아산·평택·화성 등을 경유하며 합덕에서 서울까지 50분대로 진입하게 되며, 합덕역에서 인터체인지가 있는 인근의 송악, 당진, 먼천, 고대, 신암, 신창 등 6개 지역까지 15분내에 진출할 수 있어 인적·물적 교류 확산으로 지역발전의 최고·최대의 활력소가 될 것임.
- 당진 합덕역은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시발점이자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의 개발전략과 지표를 수용하여 정부의 국토정책과 충남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면서 실현 가능한 당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속에서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을 통해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함께 누리는 푸른 당진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함.
-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시는 북으로는 송산면, 송악읍, 석문면 등이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평택시 포승읍, 화성시 우정읍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평면, 우강면 그리고 합덕읍이 삼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인주면과 선장면에 접해있으며, 남쪽으로 합덕읍은 예산군 신암면과 접하고 먼천은 예산군의 고덕, 봉산면과 접하며 정미면은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당진시의 2/3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보령시 방향으로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평택시와 경기도 인근 수도권지역까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방면으로 당진 영덕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함
- 당진시는 당진항을 통한 중국과 최단거리 교역 등의 이점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음
- 2020년말 당진시의 총인구는 171,699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마이너스 0.67%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세대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227세대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17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구는 2016년 53,026명에서 2020년 46,22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사업체 수는 3차 산업이 85.0%(10,432개)로 가장 많고, 2차 산업 14.4%(1,771개), 1차 산업 0.6%(76개) 순으로 나타남.
- 당진시 합덕읍은 입지적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합덕읍 전통 시장, 한우특화거리, 버그내순례길, 합덕성당 등 풍부한 잠재자원이 있음.
- 도로사정은 인근 32번과 40번국도, 70번, 615번, 622번 지방도, 합덕버스터미널 등을 통한 접근성이 용이하며, 개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합덕역 입지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음.
 - 합덕읍에는 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합덕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당진시는 공간적으로 당진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1핵구조와 6부핵구조로 나뉘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합덕읍은 부핵에 해당됨.
- 또한 당진시는 중심도시권육성,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 방향, 행정구역, 도시공간구상 등을 고려하여 서해생활권, 중심생활권, 동남생활권 각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함.
 - 합덕읍은 동남생활권에 해당하며, 중심권의 기능 분담 및 당진항·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원 기능을 담당함.
 - 합덕읍내 주차장은 총 17개소로 주차대수는 총 50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당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4,251대로 총 주차면수와 대입하였을 때, 주차장 확보율은 112.3%로 나타남.
 - 합덕읍 주차장 확보율은 8.8%로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안하면,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면수의 확충이 필요함. 특히 합덕전통시장 주변 200m내 1일 평균 불법주차 대수는 33대이며, 5일장 개장시에는 평균 불법주차대수는 39대로 집계되었음.
 - 합덕읍에는 어린이 공원 4개소, 소공원 4개소, 근린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은 0.018km²로 낮은 편임.
 - 당진시는 사회적기업 15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2개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합덕읍에는 19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합덕읍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합덕읍에 있는 신리성지, 솔피성지, 수리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월평균 3,676명으로 최근 1년간에는 약 3,000~4,0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 합덕성당, 솔피성지 등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해 있어 합덕전통시장, 합덕수리박물관 등과 연계할 경우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음.

○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의 동남생활권 계획을 보면 발전구상은 “다양한 테마가 있는 관광·휴양기능 부여”로 함.

- 중심지·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사·문화적 지역자원 발굴로 체험·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솔피성지~합덕제~신리성지로 이어지는 천주교 성지 유적지의 당진형 산티아고 육성하고, 면천읍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 주거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해 기능 재정립으로 도시활력 증진하여 합덕, 면천, 신평 기존시가지의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도시기능 재정립으로 도시활력 증진 도모하고, 마을(면천읍성) 역사기능 복원을 위한 인문도시 콘텐츠 발굴하며,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조성으로 항만종사자 주거·여가기능을 강화함.
-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서해선복선전철(101 정거장) 환승거점 육성하고, 서해선복선전철(101정거장) 주변 복합문화공간의 역세권 기능 육성하며, 101정거장 환승기능(여객, 물류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당진 도심 및 주변 시가지로의 접근성을 강화함.
- 지역특화를 통해 해양테마 문화기능을 강화하여 평택당진항 종사자 및 이용객 휴식·여가기능 제공을 위한 친수시설을 조성함.

○ 당진 합덕읍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역세권 도농복합형 도시재생을 통한 방안으로 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의 도농복합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산업자원을 통하여 걷고 싶은 순례길 만들기과 국제 버그내길 아트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하여 발전시켜 가는 방안임. 둘째, 당진 합덕읍의 인구유입확산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한 방안으로 대학의 유치를 통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거나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교실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찾아와 배울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통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임. 그리고 도로망 확충이나 보행교통환경의 개선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통하여 살고 싶은 합덕을 만들어 내거나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이익공유 사업이나 시민자산화를 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당진 합덕 역세권의 경우 주변 지자체 등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으며 거점 시설로서 문화시설, 교통시설, 물류센터와 같은 물류·유통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거점시설은 주변지역의 상권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고밀복합개발 형식보다 원도심지역의 유흥지를 활용하여 건립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둘째, 길 브랜드 정립과 공식루트 선정을 통해 당진 합덕읍다운 장거리 트레일로서의 상징성 강화와 특정 루트로 선별하여 명품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기준이든지 간에 당진 합덕읍의 역사문화, 자연환경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 기 조성된 걷는 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청남도 전역과 경기도 등 광역 단위 걷는 길과 연계성을 감안하여야 함
- 셋째, 기후위기와 지역위기를 지구의 위기를 통섭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뀌어낼 수는 없더라도 지구와 지역을 구할 수 있는 실천의 고리를 찾아내야 함. 따라서 200년전 버그내 순례길 위에서 국제적이며 지역적인 초연결망을 통해 ‘지구를 구하는 길(道,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파일럿프로젝트를 제안함. 예를 들면, 천주교 서울대교구-미리내순례길-버그내, 산티에고순례길-제주올레길-버그내 순례길, 자연과학-생명과학-미래과학-종교학-예술학을 연결하는 것으로 전세계 종교학자, 인문학자, 자연과학자, 예술가와 지역활동가 등이 함께 함.
- 넷째,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가 강조되고 지역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대학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지역특성화 분야의 대학 캠퍼스 집적은 고급 인력 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특성화 중심 복수 대학의 특성은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섯째, 이익공유체계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임.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봄으로써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신안군 등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결론

- 당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농복합형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철도건설에 따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살고 싶은 당진 합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전국 최고의 발

전소와 송전탑 등 건설에 대하여 지중화 등 특별한 조건의 주민건강에 관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편리한 교통여건이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당진시(합덕)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고속철도 정차역 신설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매개체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도시발전을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을 위하여 타당성 및 개발수요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자연적, 역사·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배후도시의 인구가 적고 중간역의 성격인 당진 합덕역의 도시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당진시 관내 및 배후 산업단지 등과 연계되는 물류단지 건설 등 합덕역의 특색있는 정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화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특성화 전략이 중요하며 민간투자를 위한 과도한 규모의 개발계획 수립은 지양하여야 함.
- 당진 합덕역 주변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 등 역세권 배후기능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개발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합덕읍과 연결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역사 진입 방향의 개발을 유도하여 역세권 배후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합덕의 경우 저층복합개발을 도모하는 등 차별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솔피성지, 신리성지, 합덕제 등 역사문화자원 개발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도로개설 및 교통시설 정비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여야 함
- 당진 합덕에는 버그내순례길이라는 걷고 싶은 길이 구성되어 있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 한편, 걷는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어야 함. 행정은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민간은 걷는 길을 발굴하고 운영 관리하며 해설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걷는 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함.
- 그리고 거점별 대중교통체계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걷기 여행객(순례객)이 거점지역을 출발하여 걷기여행(순례)을 한 이후 회귀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거점지역으로 복귀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점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이용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교통망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가져오며, 보행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버그내 순례길 등을 조성하여 세계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걷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당진 합덕이 200여년전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문화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 기조를 가져야 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23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 지속가능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민과 이주민 간 문화다양성을 넘어서서 당진 문화 안에 존재하는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함.
 - 특히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영역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민의 문화 즉(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임. 시민의 이해와 융합도를 통해 시민과 공존하는 문화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이를 위해 시민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이해도모를 위한 시민의 접촉면 강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도시간 교류 강화 등을 하여야 함.
 - 한편으로 지역소멸을 해소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학교의 설립이나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가져와야 함. 이를 위해 대학 공동캠퍼스 유치나 초중고등학교 방과후교실 등을 통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인구가 넘쳐나는 살기좋은 합덕을 만들어야 함.
- 당진 합덕역 개통에 따라 철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역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존 도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여함.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로, 주차장 등)을 통하여 향후 당진합덕역 확장 및 개발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물류량 배분 및 산업철도와 당진 합덕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그리고 역 주변여건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검증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함.